

第289回國會
(臨時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1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10年4月15日(木)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업무보고
 - 가. 노동부 소관
 - 나. 환경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審査된案件

- 1. 업무보고 3
 - 가. 노동부 소관
 - 나. 환경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10시16분 개의)

○**委員長 秋美愛**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 만에 여야가 다 함께 모여서 회의를 열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 노동조합법 처리 과정에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시의 상황을 다시 언급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당시 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안이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당인의 입장보다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고 따라서 상당수 우리 위원님

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으며 그 결과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가 4대강 사업이나 많은 현안이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18대 상반기 상임위 활동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동안이나마 우리 위원회가 충실하게 운영되어 우리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재윤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秋美愛** 조사관 보고 먼저 듣고 그다음에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김재윤 위원** 업무보고 하기 전에.....

○**委員長 秋美愛** 조사관 보고만 먼저 하시고.....

○**김재윤 위원** 그러세요.

○**委員長 秋美愛**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방건환** 입법조사관입니다.

2010년 2월 24일부터 2010년 4월 4일까지 발생

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새로 전보되어 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춘 입법조사관보입니다.

김태경 행정관입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 위원** 민주당 김재윤입니다.

업무보고 하기에 앞서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유감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유감을 표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위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당 위원들의 마음의 상처가 깊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진심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번 노조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의 야당 위원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면서 날치기 처리한 것이 과연 민주주의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일인지,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인지 아니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오히려 고통스럽게 한 일 아닌지 저는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국회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이 무너지면 저는 그 어떤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 노조법 개정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는 절차적 정당성도 민주주의의 원칙도 어긋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나라당과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과가 저는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건 야건 그 누구도, 다수당이건 소수당이건 일방적으로 날치기로 처리하거나 그리고 또 원천 봉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재발 방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날치기 처리된 노조법은 소수 노조의 교섭권을 봉쇄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논란과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또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저는 분명히 짚고

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당이 환경노동위원회에 참석한 것은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4대강의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산적한 이러한 현안 문제들을 뒤로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정상화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그리고 적어도 환경노동위원회가 추구해야 될 그런 가치와 철학이 있습니다. 이런 가치와 철학들이 지켜져야 하고 그리고 청년 일자리를 포함해서 일자리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대강의 환경과 생명이 파괴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노동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노동위원회가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신뢰와 신의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한나라당과 추미애 위원장님의 진심어린 사과와 그리고 또 재발방지 대책이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원진 위원** 제가 간사로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그러시겠어요?

조원진 위원님.

○**조원진 위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산적한 민생법안을 100일 이상 국회에서 다루지 못했다는 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굉장히 잘못됐다, 국민들한테 사과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법의 문제,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은 여야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국민들 간의 이견도 있습니다. 노동조합 간의 이견도 있습니다. 단지 그러한 이견을 정부 여당으로서, 여당 간사로서 같이 화합하지 못하고 조율하지 못한 부분, 최대한의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노동의 문제, 모든 법의 문제는 시대와 흐름에 따라 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

으로 글로벌 경쟁 시대에 와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의 노동 현실이 과연 글로벌 경쟁 시대에 맞는 노동의 현황인가 그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지만 우리가 한번 정부 여당으로서의 입장 또 소신을 가진 분들의 입장 표명이 있었고 또 반대 입장도 표명이 있었습니다. 좀더 통과된 법에 대한 부분을 지켜보고 그 법이 제대로 잘 정착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있는 모든 분들은 국민들 앞에서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과연 옳고 그름은 후대의 역사가 증인이 될 겁니다. 남과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모습도 좀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김재윤 간사께서 얘기하신 대로 산적한 현안을 뒤로 하고 100일 이상을 이렇게 공전한 데 대해서는 여당 간사로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좀더 우리가 성숙된 국회의 모습을 갖추는 그러한 날을 기대하면서 이번 얼마 남지 않은 전반기 상임위 활동 또 많이 계류 중에 있는 또 미상정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서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우리가 같이 협의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희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秋美愛** 그만하지시요. 야당 간사님 한 분 하시고 또 여당 간사님 한 분 하셨으면…… 우리가 사실은 간사님들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접촉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지난 몇 달 동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각자의 입장과 소신, 철학 그것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산적한 과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노동조합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그것을 되돌려 놓고 또 시비 논란을 계속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러한 진통의 시간을 우리는 위원님들이 생각이 다 다름에 따라서 또 그 생각의 차이만큼 상처의 깊이도 있었어요. 마찬가지로입니다. 저도 상처를 입었고요. 그러나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석달 동안 야당 간사님, 저,

많은 그런 서로 간의 생각들을 밝혔고, 또 저는 여야 각 당으로부터 윤리위에 회부되기도 하고 당내 징계까지 감수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아픈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그럼 우리 성숙된 자세로 이제 오늘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서 또 남은 과제들 해야 되고요.

또 이 상반기 원내 활동이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좀 인내하면서 서로 양해해주고 참고 앞으로 남은 과제에 좀 집중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제가 발언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秋美愛**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 위원** 발언 기회를……

1. 업무보고

가. 노동부 소관

나. 환경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10시30분)

○**委員長 秋美愛**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 및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이따 오후에 하시죠.

○**조원진 위원** 예, 이따 질의시간에 하시죠.

○**김상희 위원** 이건 질의시간에 할 성격이 아닙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노동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9회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노동부의 주요 업무계획과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노동부는 적극적 일자리대책 추진, 선진국 수준의 근로환경 조성, 노사문화 선진화 정착을 위해 연초에 수립한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그간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을 깊이 검토하여 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상황은 점차 좋아짐에 따라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지표도 개선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데가

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장의 과실은 결국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없다면 성장의 성과는 반감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성장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늘어난 일자리가 다시 성장을 견인하여 성장과 고용이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부의 우선과제도 일자리 창출이며 그만큼 노동부의 책임도 막중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서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꾸고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로의 변화는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과 사명의 변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일자리가 없는 사람 그리고 더 나은 일자리로 가고자 하는 사람을 중심 고객으로 여기고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소외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의 접근 방법도 시장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정책,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조직개편 등 내부적인 혁신과 함께 다양한 정책 개선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사·중복에 대한 지적이 많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효율화하여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정책 영역뿐 아니라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등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고용전략을 6월까지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줄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의 기반인 노사관계 선진화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전임자와 복수노조 관련 새로운 제도를 연착륙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성과확대 중심의 상생의 노사관계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노동부 직원은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정책을 고민하고 개선·집행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개편을 위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노동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채필 차관입니다.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입니다.

전운배 노사정책실장직무대리 겸 노사협력정책관입니다.

조재정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재갑 노동시장정책관입니다.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입니다.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입니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입니다.

장의성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입니다.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입니다.

이성기 공공노사정책관입니다.

조병기 정책기획관입니다.

한창훈 국제협력관입니다.

박종길 대변인입니다.

정철균 감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노사정위원장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원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산하단체장입니다.

김원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입니다.

유재섭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입니다.

노민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입니다.

김선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입니다.

정인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입니다.

김훈직 한국산재의료원 이사장 직무대행입니다.

허병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입니다.

전운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입니다.

(산하단체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현황을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재정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요약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기획조정실장 조재정 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조재정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최근 노동시장 여건,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현황, 주요 현안, 정부입법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노동시장 여건입니다.

어제 발표된 3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취업자는 2337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6만 7000명이 증가하여 2007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공공행정 분야를 제외한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증가하여 고용상황이 점차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워크넷과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신규 구인 인원과 구인·구직 비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업자는 100만 5000명, 실업률은 4.1%로 1, 2월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등 일시적 요인으로 급등했던 실업률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회복 기반이 확대되고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용지표도 보다 개선될 전망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노사관계 동향입니다.

1/4분기 중 노사관계는 노사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 갈등해결 분위기 확산, 정부의 법과 원칙, 노사 자율해결 기조 등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 현재 노사분규는 전년 동기대비 33.3% 감소하여 96년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전반적으로 안정 추세이나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다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4분기 중에는 노조전임자 제도개선, 임·단협 본격화와 지방선거 등이 맞물려 노사관계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4월 말부터 총파업 및 총력투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조전임자 제도개선 과정에서 야기되는 과도기적인 갈등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조기에

연착륙시키도록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취업애로계층을 지원하고 경제 각 주체의 일자리창출 역량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근로기준 제도·관행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줄여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전임자·복수노조 제도를 원만하게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적극적 일자리대책 추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위기 여파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취업애로계층에 대해 적극적 고용촉진 대책을 시행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고용여건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취업애로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겠습니다.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청년-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졸자, 전문계고 청년 구직자 DB와 우량 중소기업 DB를 확충하여 'Job-young'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에 150개교를 목표로 취업지원관을 배치하여 직업 진로지도 및 취업상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산학관 협약, 기업의 채용수요 등에 맞는 맞춤형 훈련을 실시한 후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범정부 국민캠페인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중소기업 일자리 TF를 구성·운영 중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해 청년 구직자에게 중소기업 근무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인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층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도록 창직·창업 인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애로 청년층을 위한 뉴스타트 프로젝트와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을 위한 해외취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입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금년도 2만 명으로 확대 실시 중입니다.

저소득 실업급여 수급자, 청년,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일대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주치의 제도를 금년부터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자영업자의 생계안정 및 재도전 기회 부여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 허용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약계층을 우선 배정하도록 일자리사업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총 참여기간과 중복참여를 제한하는 한편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가정양립형 일자리 창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유연근무제 선도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민간부문에도 단시간 근로가 확산되도록 적합직무 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단시간 근로를 더 고용하는 것이 정부의 규제 및 지원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육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직장보육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보다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지원요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에 직장보육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민간부문을 선도하겠습니다. 장려금 등을 통한 육아기 여성의 고용유지 지원,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 지원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베이비붐세대에 대한 지원입니다.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제도의 개선을 추진 중이며 노사정위에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성에 맞는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 중입니다.

퇴직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중견인력종합센터로 육성하고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 연결하기 위한 매칭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학력 취업 취약층을 위해서는 훈련-고용-취업 지원 프로그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직 고령자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 개발에서 일자리 제공으로 연계하는 취업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용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대책입니다.

일자리 중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워크넷에서 구축 중인 대졸·전문계고 졸업자 구직DB를 취업 애로계층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DB들을 토대로 구직자가 당장 취업을 원할 경우에는 일자리를 알선하고 교육훈련을 원할 경우에는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하며 창업을 원할 경우에는 자금 조달 등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민간 고용서비스를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직업소개요금 자율화 및 한도 상향 등 규제 완화와 취업 지원 민간 위탁 사업 확대를 통한 선도기업 육성이라는 큰 두 가지 기본 방향을 가지고 추진 중입니다.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직업안정법을 고용서비스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을 위해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정착과 주말·야간 고급훈련과정 확대 등을 통해 자기 주도적 능력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협의체를 확대하고 산업별 인력 부족 실태 및 훈련수요 조사,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산업별로 특화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전 부처에 대해 훈련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예산 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처 훈련기관·과정 등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도 4월부터 시범 운영 중입니다.

16쪽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새로운 일자리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 중입니다.

우선 정부 지원 일자리사업 중 수익성과 자립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금년 중 200개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육성하겠습니다.

지자체 및 기업 참여를 통해 풀뿌리형 사회적 기업이 육성되도록 하는 협업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비 사회적 기업 발굴부터 육성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개발

비를 지원하고 민간 부문은 대기업 연계, 프로보노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민간기업, 학계, 전문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역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부처 간 MOU 체결을 통해 지자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원 설립 추진 등 사회적 기업 역량 제고 및 브랜드 관리를 위한 지원체제도 구축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 추진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산업 등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고 노동시장 제도·관행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국가고용전략을 마련하여 공표하겠습니다.

지역 단위 일자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일자리 대책의 목표를 공시하도록 하는 일자리 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지역 고용 대책의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지역 단위 고용 대책 활성화를 통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일자리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조사·공표하겠습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5개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평가를 실시 중이며 정책이 일자리 증감에 미친 영향 분석 및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여 해당 기관에 권고 및 모니터링 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근로환경 조성입니다.

경제 발전과 고학력화에 따라 국민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지만 장시간 근로가 여전하고 산업재해율은 정체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제·노동환경 변화에 맞추어 근로기준 제도·관행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줄여 근로환경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의 유연·합리화입니다.

노사정위 논의 결과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유연화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고비용·저생산성·건강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근로시간 단

축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둘째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산재 다발·취약 분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을 대상으로 3대 재해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교육 재정 기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발주·설계·감리·시공 전 단계에 걸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자율관리업체 지정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직무 스트레스 예방과 금연운동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산업재해 자율 감소를 위해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 실시 등 노사가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중소 건설현장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건설 안전 지킴이도 운영 중입니다.

민간 부문 재해 예방활동 활성화, 산업안전보건문화 인증제 확산 등 산업안전보건문화 확산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으로 다수가 실직되고 있는 직종을 기간 제한 예외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차별 문제의 사전 예방을 위해 상담·교육·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차별 개선 지원 상담실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2011년 적용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의결되도록 지원하고 택시 최저임금 특례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임·단협 지도 및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확산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금년 말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2015년까지 공공 부문 고용률 3% 달성을 위한 정부기관 의무고용률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장려금 지급단가 상향 조정 및 근로자 지원인 제도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 기반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노사문화 선진화 정착을 위한 대책입니다.

2010년이 노사문화 선진화의 원년이 되도록 전임자·복수노조 제도의 원만한 시행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불합리한 노사문화와 파업 관행을 개선하고 생산적 노사관계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전임자·복수노조 제도의 연착륙 지원은 주요 현안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과 책임의 노사문화 구현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노사문화·파업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 점거, 업무 방해 등 핵심 우선과제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의 생산적 교섭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노동위원회가 노사 갈등 예방과 적극적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기능 개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참여와 협력의 생산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작업장 혁신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모델화하여 확산·전파하고 노사 갈등 기업을 혁신선도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관리 기법 지원 등 현장 노무관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노사 협력 사업장에 대한 인증·포상 수여 및 우수기업 벤치마킹 지원 등을 통해 현장의 노사협력 분위기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공공 부문이 노사문화 선진화를 선도하도록 법과 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공공기관 사용자가 노사관계 책임자로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주요 현안입니다.

첫 번째, 국가고용전략 수립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입니다.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정책과제를 포괄하여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본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경제 및 산업, 재정사업, 노동시장 등 5대 연구분야 30여 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5월 초에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가고용전략을 마련하여 노사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6월 중에는 고용정책심의위원회 및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확정

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노조법 개정 후속조치 현황입니다.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노사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4월 30일까지 합의 도출 노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면위 운영 방향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며 논의 의제도 확정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 실무지원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월 말까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중앙·지역·사업장 등에 대한 특화된 교육훈련 및 홍보를 통해 개정 노조법의 현장 조기 정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시 의장인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노동장관으로 하여금 금년 초 노동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의 고용위기 대응 경험, 위기 후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회의는 4월 20일~21일까지 미국 노동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노동부장관이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위기 극복 및 미래를 대비한 고용·직업 능력 개발 정책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며 차기 G20 의장국인 캐나다의 노동장관 등 주요국 인사 면담,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 노사관계 및 고용·노동 정책 개선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입법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4월 현재 총 168건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상정된 법안은 23건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등 상임위 상정 중인 법안 10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진폐법 등 신규 상정 필요 법안 12건 등에 대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받아 주십시오.

○**委員長 秋美愛**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방법은 국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상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委員長 秋美愛**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겠으며 첫 번째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상희 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요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김상희 위원님,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시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각각 2분씩……

○**김재윤 위원** 아니, 질의하기 전이었습시다.

○**委員長 秋美愛** 2분씩 의사진행발언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윤 위원** 질의가 끝난 다음이라고 하지 않았습시다.

○**김상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질의 들어가기 전에……

○**委員長 秋美愛** 합의를 해 놓으시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시면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재윤 위원**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한다는 합의를 언제 했습니까?

○**委員長 秋美愛** 허허, 참…… 아까 이 자리에서 제가……

○**김재윤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해 달라고 했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질의가 끝난 다음에……

○**김재윤 위원**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해 달라고 했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질의가 끝난 다음에……

○**김재윤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김상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길지 않습시다, 위원장님.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김재윤 위원** 주라고 하시잖아요.

○**김상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예, 그러면 일단 2분 시간을 넣으세요.

○**김상희 위원** 지난 연말의 불행한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야당 위원들이 함께 협의한 결과 우리 간사를 통해서 오늘 발언을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과 지금 조원진 간사의 발언을 들으면서 저는 도저히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짚을 것은 짚고 질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연말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노조법을 위원장이 자신의 법안을 여당 위원들과 함께 출입문을 봉쇄하고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헌정사의 초유의 사태이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사태입니다. 의회민주주의가 철저히 유린되는 현장에서 우리 야당 위원들은 울부짚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야당 위원들을 더 가슴 아프게 하고 더 상처를 받게 한 것은 위원장께서 계속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출입문을 봉쇄하지 않았다, 날치기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야당 위원들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환노위는 그 후 파행이 됐고 지금 우리 조원진 간사 표현대로 100일간의 파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원장과 조원진 간사의 말씀은 한마디의 사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100일간의 파행에 대해서 우리 야당 위원들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야당 위원들을 너무나 무시하고 그리고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어도 위원장과 여당 간사는 지난 연말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옳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다시 거짓말하고 그리고 야당 위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발언은 국민들에게 정말 무책임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야당 위원들은 한나라당의 진심어린 사과와 그리고 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

○박준선 위원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예, 박준선 위원님.

○박준선 위원 저도 2분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자면 김니다. 그리고 사과를 요구하시는데 저희는 사과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표현은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저희가 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상희 위원님이나 김재운 위원님이나 우리 홍희덕 위원님이나 의사진행을 방해하셨던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이 세 분의 회의장 출입을 봉쇄한 적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문 잠갔는데 뭐가 없어?

○李和洙 委員 왜 발언하는데 떠들고 그래?

○김재운 위원 문을 잠갔잖아.

○김상희 위원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

○박준선 위원 아니, 문을 잠근 것은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이 소속 상임위의 위원이 아닌 분들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 와중에서도 저희를……

○김상희 위원 영상자료가 다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중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문을 봉쇄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 당시의 기억을 해 보십시오.

○김상희 위원 문을 봉쇄하셨지요.

○박준선 위원 그래서 문을 봉쇄한 것은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상임위가 아닌 분들까지, 또는 일반 직원들까지 와서 소란스러운 것을 막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은 “김상희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은 들어오시도록 하라”라고 요구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김재운 위원님께서서는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 했고……

○김상희 위원 어떠한 이유에서든 봉쇄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준선 위원 지금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겠습니까?

○김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박준선 위원 지금 말싸움하자고 해서 의사진행발언 하셨습니까? 김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발언을 방해했습니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다고……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뭐니까? 아까 김재

운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해야 되는데 민주주의는 평화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수결에 따라야 됩니다. 소수의 횡포와 소수의 의견에 이끌려가면 그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야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원하지 않는 부분에 우리가 간다고 해서 그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관철하기 위해서 폭력을 쓰고 또는 소란을 피우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행동을 방치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우리가 과연 뭘, 아니, 위원장님이나 저희들이 뭘 사과를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가 무슨 폭력을 휘둘렀어?

○박준선 위원 아니, 옆에서 소리 지르고 몸을 손으로……

○김상희 위원 출입문을 봉쇄하고 날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준선 위원 자기 자식도 집에 들어올 때 범죄의 목적이란가 소란을 피울 때는 제지를 해야 됩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가 무슨 범죄의 목적이야?

○김상희 위원 말조심하세요.

(「그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박준선 위원 해 볼까요? 누가 먼저 그랬습니까?

○강성천 위원 회의진행 방해 또 누가 먼저 했습니까?

○委員長 秋美愛 위원님들, 그만 하시지요.

○박준선 위원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얘기하시지요.

○委員長 秋美愛 그만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력과 거짓말 또는 봉쇄 그런 단어를 지금 언급하시는데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회의 진행을 못하게 폭력을 쓰신 분은 바로 의사진행을 지금 제기하신 김상희 위원님 본인입니다.

영상자료 다 있다고 하셨는데 김상희 위원님이 저에게 어떻게 회의진행을 방해하시고 폭력을 쓰

셨는지는 그날 영상자료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상희 위원님한테 한 번도 사과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회의장을 못 들어오게 했다, 봉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영상자료 보십시오. 국회방송도 채증해서 보십시오. 이 위원회가 진행하면서 봉쇄한 적이 없어요. 회의장 바깥이 소란스러워서……

○**김재윤 위원** 들어오게 하신 적 있습니까?

○**委員長 秋美愛** 들어오게 했습니다.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김재윤 위원님께서……

○**박준선 위원** 김재윤 위원이 왔다갔다했잖아요.

○**김재윤 위원** 내가 다 들어와 있었어?

○**委員長 秋美愛** 김재윤 위원님께서 들어오신 거고 김재윤 위원님께서 들어오신 뒤에도 잠시 그 틈새에 제가 다시 한번 수석전문위원에게 밖에 위원님들이 계시는 게 보이니까 모시고 오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안 들어오신 것입니다.

○**김재윤 위원** 그렇게 왜곡하지 마십시오.

○**委員長 秋美愛** 그것에 대한 속기록은 제285회 임시회 속기록 제6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끝까지 거짓말을 하십니까?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하시고 왜곡하시고……

○**박준선 위원** 거짓말 아니에요. 그게 왜 거짓말이에요?

○**김상희 위원**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위원님들의 인격에 달려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뱉으신 말씀은 다 위원님들 본인의 인격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박대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 위원** 박대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의사 진행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한 해도 갔고 2010년에는 우리 환노위 의사진행이 좀 좋아져야 되겠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노동부 간부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장관님, 지난해 노동법 개정되고 난 뒤에 그

시행 후에 도출된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특히 타임오프 연착륙을 위해서 더 보완해야 할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게 뭐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법에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는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대해 위원**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없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없습니다.

○**박대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동부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에 국무회의는 노동부의 부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아시겠습니까마는 노동부는 1948년 사회부 내에 작은 노동국으로 출범을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근로감독에서 산업안전까지 관장 사무가 늘어나면서 63년에 독립기관으로 노동청이 발족이 됐고 81년에 노동부로 승격이 되면서 29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노동부가 바야흐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고자 고용노동부로 변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부처 명칭 변경 그 자체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를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로 명칭 변경에 앞서서 노동부는 연초에 고용전략과, 인력수급정책관을 신설을 하고 고용정책실을 확대 개편하는 등 고용 관련 업무 중심으로 노동부 조직을 개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용 문제에 정책 기능을 집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반면에 노동부 업무의 기본적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 감독이나 산업안전 감독에 자칫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인력 비중만 보더라도 노동부 전체의 61.6%인 3403명이 고용 분야 업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노사관계나 근로 기준, 산업안전 관련 업무의 인력은 38.4%인

2118명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국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여성이라든지 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그 인력으로는 감독 기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근로 감독이나 임금 체불 사건만 처리해도 인력이 부족해서 산업안전 감독은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3월 정부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회를 통해서 노동부의 11개 기능, 37개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하기로 결정을 했고 대통령의 재가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관님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박대해 위원** 대체 어떤 사무들입니까, 지자체로 이양된 게?

○**노동부장관 임태희** 이양된 사업들이요?

○**박대해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우선 산업안전보건업무 중에 안전에 관한 인중, 역학조사 그리고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 등 이런 업무들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그다음에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유해물질 제조 허가, 유해인자의 관리 이러한 유형의 산업안전보건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습니다.

○**박대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역학조사, 건강관리수첩 관리 등 안전보건 기능, 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 기능, 고용상 연령 차별 행위 시정명령, 남녀 고용 평등 지원, 영업정지 요청, 감독기관 신고 등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주요한 업무들입니다.

물론 부족한 노동부 인원으로 업무를 원만히 집행하기 위해서 지방에 업무를 이양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 유치를 위해서 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과연 얼마나 산업안전 감독 등 규제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고용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고용과 규제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보시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이 문제를 처음 논의할 때부터 박대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의 역량도 많이 향상이 되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자치제 운영이 해를 거듭할수록 역량이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함께 병행해서 이양과 함께 그렇게 추진한다면 지금 우려하시는 문제들을 거의 대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양 초기에 저희들이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대해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 인사말씀이나 업무보고에서도 상세하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정부의 우선과제로 일자리 창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서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부에서 소홀히 했다, 좀더 신경 써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하나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이것을 줄이는 것이 아주 시급한 문제다, 또 중요한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난해에 말이지요, 전국적으로 이 미스매치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적으로 파악된 건수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적게는 16만 건에서 20만 건까지의 구인자가 있는 반면에 또 구직자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실업자가 100만 명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매칭만 잘돼도 우선 계산적으로 16만~20만 명은 찾아갈 일자리가 있다.

○**박대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산지역 노동청의 지난해 자료를 보면 말이지요, 미스매치가 한 2만 3300건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업의 구인인원이 9만 1781명이고요, 미취업 구직인원이 30만 2400명이고 그중에 실제 취업한 사람이 6만 8463명입니다. 그래서 부산지역만 한 2만 3000여 건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몇십만 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빈 일자리, 지금 말씀드리는 저희 노

동부에 이런 일자리에 구인을 좀 해 달라, 그러니까 기업으로부터 구인 수요가 있는 것이 16만~20만 명 그 사이의 동향을 보였습니다.

○박대해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 부분은 사람을 찾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을 보내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어떻든 말이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특히 노동부에서 미스매치…… 중계 강화, 이게 일자리 창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만 잘해도 몇십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 보면 고학력 청년들, 대졸자들이 대기업을 너무 선호하고 중소기업을 상대적으로 외면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미스매치가 많이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일자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중계기능 강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니까 업무보고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일자리 특성이라든지 또 취업희망자의 요구를 잘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맞아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소위 중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미스매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길게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첫째는 정보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 청년구직자들에게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 청년들이 미리 가서 경험하면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가 일자리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학교에는 대개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신 이런 분들을 취업지원관으로 학교에 배치를 해서 이분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필요한 빈 일자리 또는 새로운 일자리에 학생들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구체적인 역할을 좀 하도록 해야 되겠다.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정부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금융이나 부동산에 중개회사들이 잘 발달되듯이 구직자와 구인자간의 중계역할도 좀 민간 부문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인력회사를 저희들이 출범시킬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위원님 순서입니다.

○김상희 위원 김상희입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파견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잠깐만요. 그게 말씀 그대로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된 건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얼마나 파견돼 있는지 숫자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김상희 위원 불법파견이 굉장히 횡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 이 파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저희들이 파견제도 문제는 굉장히 좀, 기업에서는 개편에 대해서 수요가 많고 또 이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많은 영향을 받는 제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상희 위원 실태 파악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는 연내에 파견허용업종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렇게 뭐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가 여러 가지 근로형태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확대 차원에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요구가 있고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이 파견허용업종

확대에 대한 것은 노동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파견허용업종 확대나 허용업종과 관련해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실태 파악이 우선이겠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래서 지금 사용자 사업체에 대해서만 실태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

○김상희 위원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수요조사기 때문이에요……

○김상희 위원 이것 보고받으셨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수요조사에 대해서는 많이, 파견업종 확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파견업종 확대와 관련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해관계자가, 사용업자가 있고요.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김상희 위원 그다음에 또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김상희 위원 그리고 또 파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용자업체의 실태 및 수요조사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게 왜냐면 워낙 문제제기가 많이 나오니까……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만 하셨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조사는 지금 수요조사만 했습니다.

○김상희 위원 우리 의원실에서 노동부에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굉장히 꺼려하고 계십니다. 이 결과보고서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그룹들의 실태 및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정책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 측면에서만 조사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파견된 근로자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근로자 측면에서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위원 근로자들, 파견업자들, 사용자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놓고 정책결정을 하시기 바라구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리고 이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제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돼야 될지, 하여튼 파악해서 제가……

○김상희 위원 아니, 왜 자료 제출을 못 하십니까, 수요조사인데?

○노동부장관 임태희 왜 그러냐면 이 자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조사인지, 공신력 있게 노동부의 공식자료로 낼 수 있는 자료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희 위원 아니, 노동부에서 했으면 제대로 된 자료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노동부장관 임태희 하여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만약에 이 조사에 한계가 있다면 그 조사의 한계를 명백하게 밝히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김상희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노동부가 연구용역 발주를 하는데 노동연구원에 위탁한 과제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자료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말씀을 해 보십시오. 2010년도에 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 발주하신 게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2010년도 들어서 새로 발

주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한 건도 없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없습니다.

○**김상희 위원** 한 건도 없습니다.

2009년도 노동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중에서 노동연구원에 발주한 게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33건에 23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십시오, 장관님!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김상희 위원** 지금 4월 말인데요. 평년에 비교해 볼 때 노동연구원에 이렇게 한 건도 위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노동연구원 자체가 정상화되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 노동연구원의 여러 가지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작년에 발주한 사업에 대한 사업수행이 저희 노동부가 당초에 주문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새로운 발주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될 때까지는 보류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 부분, 어떤 것이 지금 연구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것은 용역건별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장관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연구원이 원장과 갈등을 빚고, 지난번 국감 때인가요? 국감 때도 전 연구원장이 와서 머리 숙여서 사과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을 계속하고 그리고 노동연구원에서 연구원들하고의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해서 결국은 퇴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노동 관련 국내 최대의 연구기관입니다. 최고의 연구기관입니다. 지금 하나도 위탁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노동부가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언론에도 보도됐던 노동패널조사라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필요하고 정책수립에 아주 중요한 기초자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노동연구원에서 그 자료를 조사를 해서 현재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들이 내부적으로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상희 위원** 장관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몇 건의 연구과제 용역을 줬는데 몇 건이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동연구원에 줄 수가 없었다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노동 관련 연구과제를 어디다가 위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이 작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연구주체들을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노동연구원이 그동안 정말 최고의 최대의 노동연구기관이었지요? 그런데 노동부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한 건도 연구용역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노동부가 노동연구원을 길들이기 위해서 지금 거의 협박에 가까운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일체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연구기관에게 어떻게 지금 연구용역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 연구용역 계획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리고 이런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는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조금 기회를 주시면 노동연구원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희 위원** 잠깐요,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부 업무 지방이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업무가 지금 지방에 이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동부의 입장은 뭡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분권화는 행정의 중앙집중화를 막고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지방으로 이양하자 하는 게, 또 다른 산하기관이면 산하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현장을 접하고 있는 곳으로, 현장으로 이양하는 것이

큰 대세로 돼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업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것으로 지금 지방분권위원회에서 내놓고 있지요? 그 다음에 차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정업무가 어떻습니까? 이런 업무들을 지방에 이양해서 지방에서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특히 산업안전업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ILO 협약을 체결했는데 거기에 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산업안전업무도 그렇고 고용차별업무도 그렇고 차별개선업무도 그렇고 이게 정말 현장밀착형 행정수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독관들을 파견해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에 현장의 사정을 잘 아는 그런 조직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제도설계나 기본정책 방향에 대한 것은 저희 노동부가 그대로 관장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현장 일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토록 그렇게 이원화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박준선 위원님이십니다.

○박준선 위원 오랜만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이채필 차관님 축하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상임위를 열었는데 열자마자 부터 싸우는 모습을 보여서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그런데 장관님!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박준선 위원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꾼다고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바꿉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면 약칭은 뭐가 됩니까? 고노부가 됩니까, 고용부가 됩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양쪽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약칭 없이 불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고용노동부?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박준선 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로 한 이유는 결국 이제부터는 고용창출이 국가적인 과제다 하는 그런 국가적인 결단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선 일자리가 중요하다 하는 수요자 시각에서의 명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지금 실업률이 4.1%로 조금 안정되고 있고 청년실업도 10%를 넘다가 지금 9%로 줄었다면서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박준선 위원 다행스러운 소식이긴 한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일자리특위라고 국회에서 만든 특위의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각 부처에서, 환경부 그다음에 법무부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 그다음에 문화관광부 등 많은 부처들이 거기 와서 일자리 대책, 정부 차원의 각 부처의 일자리 대책에 관련된 이런 대책을 업무보고 형식으로 보고받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장관님, 각 부처의 일자리 대책이라고 하는 업무보고서라든가 그런 것 받아보신 적 있어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제가 그 문제는 작년 예결위 때부터 각 부처의 일자리사업이 너무 중복돼 있고 산재돼 있고 이게 너무 칸막이들도 심하고 해서 문제가 많다 하는 문제점을 인식을 해 오고 저 스스로 그것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 노동부가 종합해서 그 문제의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오는데 일자리 공시제도 그렇고 국가고용전략 이것에 대해서 심층적인 연구와 방안을 국가적인 전략적인, 국가 전체적인 고용확대전략 이것을 만들려고 한다는데, 지난번에 제가 일자리 특위에 가서 보니까 각 부처에서 국가적으로 이미 그런 전략이 노동부에서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또는 국가적으로 정부 내에서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각 부처에서는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실업 해소라든가 실버, 어르신들의 일자리 만들이라든가 이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미 각 부처에서 하나의 과제로서의 문제의식을

찾고 일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박준선 위원 그런데 그때 일자리 대책이라고 만들어진 것 보면 문화관광부는 골프장 인허가를 완화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또는 법무부는 외국인노동자 단속을, 불법체류자 단속을 해서 내국인 일자리를 확보하겠다고 하는 현지의 이런 상황하고는 인식이 매우 많이 동떨어져 있고 좀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환경부라든가 노동부를 제외한 각 부처—총리실까지 포함해서—가 과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디가 미스매칭인가 그리고 어떻게 청년실업을 해소할 것인가,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가 총괄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장·차관들의 인식이 전혀 안 돼 있었고 또 인식이 일부 있더라도 서로 다르단 말이지요.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지금 위원님 지적 말씀에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대책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 그냥 일과 관련된, 자리와 관련된 그것 빨리 국·과별로 가져와라 해 가지고 짜집기해 가지고 가져온 형식이 역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제안하건대 일단은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꾸고 고용창출 확대를 위해 국가적인 과제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려면 노동부와 노동부에 있는 직원들, 공직자들의 힘만으로는 안 될 것이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박준선 위원 전 부처가 국가적으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전부 나서서, 그리고 거기에 민간 기업까지도 협력을 해야지 일자리가 늘지 우리가 예산 몇 푼으로 해 가지고, 희망근로니 이런 것 해 가지고 일자리 늘어 봤자, 또 청년인턴 하고 해 봤자 그것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고 그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국가의 어떤 경쟁력이 늘어나는 진정한 그런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전 부처가 현재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고용이 어떤 식으로 미스매칭 됐는

지,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책을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그중에서 노동부장관이나 또는 총리실에서나 청와대에서 각 부처에서 할 일에 대한 구체적인 할당을 해 주었을 때, 또는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꼈을 때 각 부처에서 하는 그런 대책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이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장관님께서서는 바쁘시겠지만 이 채필 차관님, 지금 과거에 관계 부처끼리 이런 문제 갖고 회의를 하는데 이번에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의 부분에서 대통령께서 정리를 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노동부는 당연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차관들을 모이게 해서 회의를 한다든가 또는 기조실장을 모이게 해서 회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거죠. 문제의식을 불어 넣어야지 해결책이 나온다 이거지요.

그래 가지고 과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가령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역할이 뭐냐, 자기들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것을 비공식적으로 얘기 한단 말이에요. 아마 장관님께서도 그런 하소연 들은 적 있을 거예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박준선 위원 하지만 할 일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박준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가고용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은 어떤 그런 커다란 무슨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나오기 전이라도 일단 노동부에서 전문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회의를 자주 소집하고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한 가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개 일자리 문제가 금년도 들어서 각 부처의 가장 중요한 업무 과제로, 국정 의 과제로 부각되다 보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과 제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늘릴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업무계획을 짚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수요

에 동떨어지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사례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결국은 시장이 반응을 해야지 정부 정책이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리고 일자리 공시제만 해도 도입한다고 업무보고 했는데 거기에도 지금 자치단체장만 언급하고 있잖아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런데 각 부처의 장관·차관, 그다음에 고위공무원들, 고공단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또 심지어는 과장급까지도 자기가 하는 일이 일자리와 어떻게 관계 됐는지 이런 부분의 공시제도의 어떤 그런 것까지 중앙부처에서도 연결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길 게 아니라.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노동시장정책관하고 인력수급정책관을 둔 이유도 이제 고용 문제를 종합적으로 시장의 관점에서 풀어 나가야 정말 현장에 적합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박준선 위원 그렇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런 저희들의 생각에서 그렇게 직제 개편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부 예산이 직접적으로 고용 창출한 그런 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에게 영향을 줘서 민간의 시장이 확대되고 고용시장이 확대되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아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준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자리 정책이 기존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디딤돌 일자리, 행안부의 희망근로프로젝트,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지원 예산이 겹치고 중복되고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혹시 아시겠지만 한겨울에 12월·1월 달에 어르신들 실버, 지금 65세 전후해서 기력 있는 분들께서 희망근로 신청해서 일하는 것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박준선 위원 한겨울에 손이 얼어 터지는 그런 추운 겨울에 전봇대에 있는 불법 광고물 그것을 물로 해 가지고 맨손으로 떼어 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일을 해 가면서까지 희망근로의 어떤 그런 지원을 한겨울에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나, 평생 고생하다가 우리나라를 이만큼 세운 양반들인데 그중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거기에 걸맞은 일거리를 줘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고 있던 말이에요.

노동부는 그런 면에서 적절한 예산 집행, 그다음에 여름에는 풀 뽑기를 해도 좋고 뜯어도 되지만 한겨울에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지방공무원들의 어떤 몰지각한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준선 위원 무분별하게 예산 얼마 하고 거기에서 숫자 곱하기 나누기 해서 예산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노동부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박준선 위원 어르신들이 그런 일 하면서 나타나 이 국가에 불만 안 갖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일자리 정책 하면서 예산 많이 쓴 것을 실적으로 하는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고 시장에서 정말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그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 했느냐 하는 시장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홍희덕 위원님이십니다.

○홍희덕 위원 장관님, 오랜만입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홍희덕 위원 작년 11월에 있었던 철도노조 파업 이후에 지금 철도노조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량 해고 및 정직, 이 징계 관련해서 노동부가 지금 팔짱 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저희들이 대책이라 함은 어떤 경우에도 법과 원칙이 있으면 그것은 지켜져야 된다. 철도노조의 경우에는 당시에……

○**홍희덕 위원** 불법파업을 했다,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장관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 이것은 왜곡되고 호도한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철도노조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반대하는 정치파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 사실과 달라요. 만약에 공기업 선진화에 반대하는 파업을 했다면 그것은 2008년 12월에 했어야지요. 당시에 분명하게 철도노조와 철도공사의 교섭은 공기업 선진화와는 별개로 진행됐고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는 별도로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이 진행됐던 상황이고 일방적으로 교섭 결렬, 60년간 이어오던 단협 해지, 이것 철도공사 측에서 끝나고 나서 단 2시간 만에 기습적으로 이렇게 단협 해지해서 통보가 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호도하지 마십시오.

○**노동부장관 임태희** 핵심적인 내용은……

○**홍희덕 위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노동부가 해야 할 역할이 전혀 없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해직자 복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인력 충원이라든가 특히 해직자 복직 문제…

○**홍희덕 위원** 장관님,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어쨌든 노동부가 나서기 전에 1만 2000명에 이르는 해고 사태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노사 관계 책임의 중심에 있다라면 어떤 형식이 됐던 중재에 나서야지 그렇게 노사 간의 문제로만 내버려둘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활동들을 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심지어 철도공사의 징계 과정에서 장애인 노동자를 일부러 일할 수 없는 곳으로 전출까지 보내는 인권 유린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당연히 나서서 실태조사를 하고 중재에 나서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친기업 반노동을 노골적으로 표방하는 이 정권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1만 2000명에 달하는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대량 징계, 노동부의 앞으로 입장이 조금 있습니까?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장관님? 중재에 나선

다고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촉구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가 잘 아시다시피 징계 조치는 공사 측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구제 개선도 결국은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동부가……

○**홍희덕 위원**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서 노사 간의 문제로 그냥 두고 보실 작정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홍희덕 위원** 그래서 되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노동부가 사전적으로 이 사안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희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님!

○**委員長 秋美愛** 예.

○**홍희덕 위원**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벌어진 지금의 이 사건들은 정말 심각한 노동3권의 유린입니다. 이에 대해서 때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환노위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을 출석시켜서 이 사태의 진실을 좀 규명하고 작금의 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건의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예.

○**홍희덕 위원** 노동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셨지요?

지금 철도공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내고 있지요, 위원장님?

○**중앙노동위원장 이원보** 예.

○**홍희덕 위원**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철도공사가 징계를 단행한 숫자가 1만 명에 달하고 이들이 현재 철도공사에서 징계 관련 재심이 끝나면 구제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그 숫자가 1만 명이 넘지요?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구제신청 낸 경우가 있습니까? 없지요?

○**중앙노동위원장 이원보** 아마 단일 건으로는 최근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희덕 위원**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면 노동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각각의 내용을 좀 검토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중앙노동위원장 이원보** 저희들의 판정 기준은

대체로 세 가지로 나뉘집니다. 목적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그다음에 양정의 적정성, 이 세 가지로 나뉘지는데 그것은 공익위원들이 아마 그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엄정하게 판정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희덕 위원**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각각 수행한 업무와 행동이 개별로 다릅니다.

○**중앙노동위원장 이원보** 예, 그렇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수백 명 단위로 묶어 가지고 처리하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을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자칫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를 건성으로 처리하게 되어서 또 다시 문제의 불씨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노동위원회가 특별대책반을 좀 구성해서 철도공사의 대량 징계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고 치밀한 조사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중앙노동위원장 이원보** 아마도 대책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사안별로 엄정하게 조사를 하고 그리고 판정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희덕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산업안전공단이사장님,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쳐서 여수·광양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셨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예, 그렇습니다.

○**홍희덕 위원** 이 조사에는 12개 사업장 6만여 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 결과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고 또 림프조혈기계암의 발생률과 입술·구강·인두암의 발생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저는 물론 이 조사에 한계가 있고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단에 이 역학조사의 로데이터(raw data)를 요구했는데 공단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필요한 것을 말하면 가공해서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 공단의 오만함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 재원으로 이 정도 규모의 조사를 하면 데이터를 공개해서 이 조사의 공정성·신뢰도를 대외적으로 검증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조사에서는 많은 축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공단의 연구원만이 아니라 여수산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민간의 전문가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곳이 더 위험하고 위험의 특성들을 알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벤젠은 이런 곳에서 더 많이 나오더라, 건설노동자는 이런 상황에서 노출이 더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도 공단은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 공개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왜 안 하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노민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저희들 임의적인 판단은 아니고 근로자와 사업장으로부터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는 동의를 받아서 이것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로데이터를 제출하려면 근로자와 사업장으로부터 동의를 좀 얻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기관, 실시하는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금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희덕 위원** 이사장님, 이게 뭐 특별하게 그렇게 어려운 지점이 없으면 공개를 하시지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그게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업장의, 영업상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희덕 위원** 개인 프라이버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독점하지 말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민간 전문가들과 공유함으로써 여러 가지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한다고 보여지고요, 이것 못 하는 이유가 있다면 상황이 더 심각한데 은폐했다거나 허점이 너무 많은 조사이거나 이것 뭐 문제가 있어서 공개 안 하는 겁니까? 도무지 왜 안 하는 겁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전문가들 간에는 공유하고 있고 이것을 일반 모두에게 공표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홍희덕 위원** 아니,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제출할 겁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관련 법의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요구한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제출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임의로 제출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양

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기가 막힙니다. 못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사장님, 못 하겠다는 겁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왜 조사해 놓은 3년간 있는 것 위원에게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상임위원에게도? 담당 위원에게도?

○**노동부장관 임태희** 제가 그 사정을 좀더 알아보고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계속해서 요구에 대해서 따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장관께서.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위원장님, 조금 양해해 주시면 철도공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홍희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1만 명이 넘는 많은 직원들이 지금 징계 조치를 받게 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직원들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사정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과 원칙대로 집행하고자 하는 공사 측의 입장이 있어서 혹여 오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근로자들이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 점을 제가 관련 부처로 하여금 검토토록 그렇게 국무위원으로서 제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노동부가 좀 나서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나서서 중재하셔야 됩니다. 1만 2000명이……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委員長 秋美愛** 철도 노조에 대해서는 노조 측 입장에서는 철도공사 쪽에서 진행되어 오던 대화를 어느 날 갑자기 파기를 하고 협상이 더 이상 없다는 식으로 강경 자세를 보이니까 반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께서 경찰 행정관료로서 노사 간의 문제를 지나치게 정부의 공권력을 언제쯤 구사할 수 있는지 어떤 명분과 시간 별기용으로 보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

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단 반발을 초래하고 이렇게 1만 2000명까지 대량 징계했다는 것은 우리 노동위원회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일이다, 잘못하면 이것은 어떤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특히 노동부에서 이것을 법대로, 원칙대로…… 그것이 그냥 노동위원회 가서 알아서 선별 구제되든지, 말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노동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봐지고, 그런 점에서 때늦었지만 홍희덕 위원님 제기해 주신 문제는 그냥 일과성 질의가 아닌 심도 있는 질의로서 추후 따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좀 해 주시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강성천 위원님이십니다.

○**강성천 위원** 장관님 오랜만입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강성천 위원** 산업안전보건기능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됐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강성천 위원** 그게 옮기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지방분권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실시한 겁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지방분권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기구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강성천 위원** 그런데 장관님, 2009년 산업재해자는 약 9만 8000명으로 2008년에 비해서 2.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2200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장관님, 한 사람 목숨 값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따지겠습니까?

○**강성천 위원** 그냥 대충 요즘 노동자들이 얘기하는 개 값으로 따져도 한 4~5억은 가지 않겠습니까? 2200명이라 하면 그 액수로 봐서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저희가 통상 산업안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을 계산합니다마는, 저는 사람의 문제를 경제적 가치로 따지는 것에 대해서 썩 그렇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산업안전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장관님께서도 인식하시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큰

로자의 목숨도 중요합니다.

○강성천 위원 작년 노동부는 53개소의 안전관리 대행기관을 점검했습니다. 거기 5582명의 산업안전 관리자 직무교육 등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각종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맞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강성천 위원 이것도 산업안전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런데 지금 최다 산재 발생 업종인 서비스업은 3만 1000여 명이 산업재해를 당했고 조선업의 재해 비율은 1.35%로 평균 재해율의 1.9배가 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은 1.75%로 매우 높는데 아직도 산업안전 분야가 개선할 부분이 많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하여간 후진국형, 정말 후진형 재해들이 아직도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것의 근본적 대책을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본 위원은 이번 결정은 정부가 ILO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고 2012년까지 산업재해율을 0.5%로 낮추겠다는 방침에도 배치되는 사항인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7%대의 저희들 재해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5%대로 낮추자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 이양 문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소홀히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현장형 행정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넘긴다 하는 그런 기본 원칙에 의해서 넘겼는데……

○강성천 위원 예,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자칫 이것이 산업안전에 소홀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보완 대책을 준비하고 또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장관님,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다시 중앙으로 이양하는 선진국 추세와도 지금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에 동의하시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저희 노동부에서 산업안전의 근본적인 제도적 대응이라든가 정말 근원 처방에 대해서는 지금도, 앞으로도 또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집행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방으로 이양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성천 위원 지방으로 옮겼을 때 과연 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산업재해가 예방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늘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아는 경우로 봐서는 지금 지방으로 갔을 때 이게 주로 건설업 이쪽에 많은데, 건설업 경우가 많이 재해가 발생하는데, 지금 지방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관리·감독한다고 했을 때 그게 되겠느냐 하는 그 부분이……

○노동부장관 임태희 이번에 희망근로사업 중에 산림, 숲 가꾸기 사업에서 재해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기는 성격상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그런 점도 있고, 또 조사를 해 보면 사전에 안전 교육이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되지 못하고 그냥 단순한 작업처럼 생각하고 하다가 그런 사고가 났는데, 지방이 물론 아직 저희 노동부에서 생각하는 수준으로 이 업무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좀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 훈련과 저희들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장관님, 전문성이 결여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결정과 기업 위주의 산업안전 규제 완화로 국가가 관리했을 때보다 산업재해의 증가가 명약관화한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저희들이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 말씀에 그 우려하시는 점을 저희 노동부 입장에서도 토의 시에 함께 논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가 이양을 계기로 해서 지방의 현장에서도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더 발전의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강성천 위원 이것 취소할 용의 없으세요? 노동부가 다시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저희 노동부에서 근원적인 제도의 설계나 제도의 근간과 관련되는 부분은 여전히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부도 지방 조직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방 조직에서 이것을 이양받게 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서 교육하고, 기본적으로는 근로자와 사업 시행자 간의 문제가 더 중요함

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도 안전 수칙이 철저히 이행되고 교육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리고 노동부는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네트워크 구인·구직 정보를 강화하고 고용지원센터에 잡 클리닉을 설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구직자 명부가 직원 채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명을 면접을 했는데 그 중의 50대 1명이 구직을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구인 및 구직 연결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인력의 데이터를 저희들이 충분히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점들은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대개 요구하는 인력들을 좀 맞출 수 있도록 지금 청년 구직자들의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교육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구직자와 구인자간에 흔히 연결, 매칭시켜 주는 그 역할이 아직은 그렇게 흡족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도 계속 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 근원적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OECD 주요 국가들의 고용서비스기관 직원 1인당 경제활동 인구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독일이 452명, 영국이 443명, 그리고 일본이 5461명인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7887명으로 아주 열악한 수준입니다.

고용지원센터의 경우 밀려드는 실업급여 신청자들로 인해서 집중적인 상담이 사실상 불가능했 고요. 채용 성공률은 올해 23%여서 선진국 수준인 40%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장관님, 인정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지금 말씀하신 그 현황에 대해서 보고받았습니다.

○강성천 위원 우리의 경우에도 상담 및 지원

인력을 확대해서 높은 수준의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 창출과 실업 문제 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래서 저희가 직업안정법을 고용서비스촉진법으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공공복지뿐만이 아니고 민간에 바로 이런 고용서비스기관들이, 고용서비스회사들이 많이 생겨나서 시장에서 좀 인력,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연결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인력회사들은 고용 창출도 하면서 새로운 고용을 또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종의 일자리 발전소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성천 위원 서민과 소외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 방안이라는 대통령의 말씀도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유념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저희가 일자리 없는 사람이, 부동산이나 금융이 필요한 사람들이 은행이나 부동산 중개소를 찾도록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바로 좀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미스매칭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이찬열 위원님이십니다.

○이찬열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장안의 이찬열입니다.

그동안 연말부터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정말 국민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바꾸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신데 2009년도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고용 관련 예산만 약 한 1조 6000억이 지금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2009년도는 추경 예산까지 감안이 됐지만. 그런 상태에서 이름을

고용노동부로 바꾼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장관님의 생각이지 노동부 전체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장관하고 직원들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산 규모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직원들의 숫자나 또 저희들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의 수요가, 정책의 수요가 일자리 중심으로 있어야 되고 특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자리 문제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문제를 총괄하는 기능이 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더 시장의 관점에서 또 일자리가 없애고 생하는 이런 분들의, 수요자 관점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찬열 위원** 그래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자리 문제가 말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렇습니다.

○**이찬열 위원** 예산이 집행이 돼야 일자리가 창출되든지 일자리가 증대되는데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이름을 고용노동부로 해서, 말은 고용을 확대시키고 창출시키고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얘기를 제가 여쭙보는 겁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지금 지적하신 일자리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저희들이 긴급한 추경에서 워낙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줄였고요……

○**이찬열 위원** 이것 4대강 때문에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그렇지는 않고……

○**이찬열 위원** 어디서 얘기 들어보니까 기재부에서 2012년까지는 사업할 생각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저희는 지금 일자리 문제 해결을 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급적 줄여나가는 쪽으로 업무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아니, 노동부에서 기재부에 예산 신청했을 때 기재부 쪽에서 2012년까지는 신규사업 또 큰 사업을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들은 적은 없으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저희들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1조 6000억이나 삭감이 됐는데도 노동부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다면 고용에 대한 업무를 할 의사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집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런 점보다 2010년도에요……

○**이찬열 위원** 장관님, 그것은 됐고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시간 좀 주시지요.

2009년도 예산할 때 한시적 일자리사업 이것은 단기적으로 집행하면서 한시적으로만 집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찬열 위원** 한시적이 아니고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15억 이것을 비롯해 가지고 그다음에 구직급여는 1조 1000억이, 그것은 나중에 추경에 또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지요. 그래서 1조 6000억이 준 겁니다. 이것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런데도 일자리가 지금 조금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봐 주십시오.

○**이찬열 위원** 그러니까 개선되는 게 노동부 말대로 고용을 증진시키고 창출하는 노력이 있는 다음에 일자리가, 고용이 늘어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늘어나는 것을 기다리시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저희들 밤새서 하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이 누굽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어느 교수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찬열 위원** 차관님, 모르세요? 새로 돼서 모르시나?

○**노동부차관 이채필** (뒤를 돌아보며)

이강숙 교수님……

○**이찬열 위원** 촉진위원회가 노동부 업무를 다 뺏어간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거기 위원장이 누군지…… 이것 혹시 이명박 대통령 아닙니까, 여기?

○**노동부차관 이채필** 회의체에 저희들이 직접……

○**이찬열 위원**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니까 말을 못 하시는 것 아니냐 이거지.

이게 말이나 됩니까? 노동부 업무를 갖다가 지방분권화라는 미명하에 다 뺏어가고 있는데 거기 위원회 위원장 이름도 모르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지나갔어요, 그것.

장관님!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이찬열 위원** 참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 저는 뭐 측은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과연 얼마나 알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노동부 업무를 지방으로 이관을 시킨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보면 11개 기능에 대해서 노동부 자체 내에서 전부 ‘부동의’라고 다 표시를 했는데, 그러면 쓰기만 부동의라고 쓰고 말로는 그냥 다 가져가라 얘기한 건지, 1건도 남아 있는 게 없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생각한 대로 100%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의도와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역량을 자꾸 키워서, 또 지방에서도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이찬열 위원** 이런 역량은 지방에 키울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방 역량을 키우는 것은…… 아까 장관님이 말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기업에 관한 활동입니다, 이게 노동부에서. 어떤 수도권이고 호남권이고 경상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 관한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 관한 업무는 직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일인데 이것을 모조리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거기 위원장 이름도 모르고 앉아 있고,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뭐 또 뺏어가는 지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이양 대상 업무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찬열 위원** 지금 여기서 갈 수 있는 이런 게 노동자들의 안전과 근로 약자 보호에 대한 사항이 주로입니다. 이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지금 근로감독관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청의?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물론입니다.

○**이찬열 위원** 근로감독관…… 누가 관리를 합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근로감독관들이 하는 일은 또 하면서요, 근로감독관들이 미처 커버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아니면……

○**이찬열 위원** 근로감독관들이 커버를 못 하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야지 근로감독관이 커버 못 할 것을 일반 아무나 갖다가 시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효율적으로 지방에서도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면서, 다만 이제……

○**이찬열 위원** 답변하실 게 잘 없는 것 같은데 이것 정말……

○**노동부장관 임태희** 이 문제는, 초기의 과도기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이나 훈련이나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찬열 위원** 이게 대부분 일관성과 신뢰성, 전문성이 필요로 되는 그런 업무인데 이것을 중앙에다 놓지 않고 지방에다가, 이것도 지방분권이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교통사고에 대한 업무를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를 줄인 것은 실질적으로 무슨 교통정책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등·하굣길을 도와주고……

○**이찬열 위원** 하여튼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이러면서 사실은 개선됐거든요.

○**이찬열 위원** 장관님, 그것은 나중에 말씀 듣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른 나라에도 보든가 또 ILO 81호 거기에도 보면 근로감독관이 해야 되고 또 그 근로감독관은 중앙의 영향력 아래 되어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탐탁하지 않게 역으로 가는 현실을 지금 만들고 계신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앙에서는 노동부 일 이것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굉장히 인력이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대책은 뭐 있습니까, 따로?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근로감독에 관한 기본사항들, 예를 들면 근로기준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가, 또 산업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이찬열 위원 30초뿐이 안 남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불이라든가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하는 여러 가지 감독 업무가 충분히 많습니다.

○이찬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이렇게 결정은 됐지만 지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으면 강력하게……

장관님, 대통령하고 가깝게 지내시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찬열 위원 이게 소홀해졌는데요, 벌써 이미? 업무가 소홀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좋은 지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진 위원님이십니다.

○조원진 위원 장관님,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된다는 것은 사실 고용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고용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으로서 강조를 하고, 고용노동부로 가는 시기적절한 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문제는 아까 이찬열 위원님께서 1조 4000억 정도의 고용에 대한 예산, 여러 가지 노동부 전체 예산들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그 부분보다는 지금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신규투자 내지는 R&D 투자를 해서 고용을 창출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조원진 위원 실질적으로 민간기업들이 2005년도에 64조 정도를 갖고 있었는데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문제 이후 2008년도에 78조 9000, 심지어 2009년도에는 103조 8000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단기예금, 현금 보유, 장기예금, 이 세 가지로 여유자금을 돌리고 있는데 지금 장기예금비율은 전체의 한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장기예금이 지금 104조

정도가 되는 것은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에 31%나 늘었습니다. 기업들의 더블딥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부가 고용의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임시적인 고용정책을 써서 가시적인 실업률을 높이는 상황…… 왜? 실업률이 너무 높아지면 정부의 고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사회적 문제가 있으니까 임시적인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근본적인 정책은 기업들의 돈을 투자 쪽으로 유도하는 게 근본 정책을 쓰는 방향이거든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심각한 상황이 지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업의 모럴해저드도 굉장히 많다, 심지어 28조 정도를 기업이 대출해서 이 돈을 투자하지 않고, 투자를 위해서 대출해 놓고 은행에다 넣는 경우도 한 3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지 않고 지금 ‘고용을 하겠다, 고용노동부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지 않다, 저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고용노동부로 기왕 같 것 같으면 획기적인 정책을 써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600대 기업에 대해서 고용총량을 발표해야 됩니다. 6개월에 1회씩 고용총량을 발표해야 되는데 모 회사들은 신규채용만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는, 그 신규채용보다 배가 지금 그만두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만두는 현상에 대해서는 전혀 발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동부가 나서서 이제는 고용노동부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600대 기업에 대해서 6개월에 한 번씩 공개적인 고용 동향, 고용총량을 발표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 대한민국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할 수 있는 일 해 봐야 지금 정부 재정 상황도 어려운데 얼마를 하겠습니까?

장기예금에 있는 돈 104조 만이라도, 단기예금이라든지 현금 유동성 갖고 있는, 금고 안에 있는 것은 놔두자 이거지요. 장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104조 만이라도 좀 풀어 줘야 된다, 기업이.

고용총량제를 하면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총량제를 발표하게 되면, 고용을 창출하게 되면 R&D 자금 안 넣을 수가 없

습니다.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획기적으로 그런 방법에 대한, 600대 기업에 대해서 고용총량제 발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국가고용전략 청사진이 언제까지 마련되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5월 달에 아마 관계부처 협의의 들어가서 6월까지는 확정할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6월 달에 마련되기 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업들의 어려움도 있지만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기업들이 성장에…… 단기적으로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다 후퇴하고 다 망하는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들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투자 방향으로 가야 되고 노동부나 정부에서 강력한, 이것은 여야가 없는 겁니다,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모 대기업 총수들이 사면·복권 받을 때 사회적인 헌신 또 국가적 경제발전의 문제, 지금의 아젠다는 고용이거든요. 지금 CEO들이 고용을 많이 해야 애국자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고용 창출을 위해서 기업들의 분발 내지는 사회적인 환원이 필요한 시기다. 물론 기업들이 98년 IMF 때 한번 큰 경험을 해서 더 불답에 대비를 해서 돈을 갖고 있는 것은 맞다고 보지마는 도가 지나쳤다, 작년에 비해서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104조, 장기에금만 104조입니다. 이것은 2005년에 비해서 50조가 는 겁니다, 장기에금만. 그러면 단기에금하고 나머지 현금 보유는 얼마나 많이 갖고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고용이 안 되는 이유 중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서 할 건지…… 제가 생각하는 정책은 그거고요.

한 가지 정부 기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고용에 대해서 솔선수범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솔선수범을 하는 게? 그런데 청년인턴에서, 정부 기관에서 보면 공공기관의 청년인턴이 최하입니다, 3.2%입니다. 공공기관이 청년인턴 한다고 노동부에서 광고 내고 ‘청년인

턴 잘 되고 있습니다’ 하고 신문에 내고 그러는데 거짓말이지요. 공공기관이 3.2%라는데 기업에서 청년인턴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최소한도 10%까지 올려야 됩니다.

공공기관에 간 청년들은, 인턴제를 실시할 때 철저한 선발로 잘 뽑아서 공공기관이 10% 정도의 인원을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 인원 감축하고 말이지요, 공공기관 선진화 한다니까 청년인턴 자리까지 다 막아 버리니까, 정부가 막으니까 기업들은 자동으로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인턴 3.2%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고용정책, 아무리 MB정부에서 고용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얘기를…… 일자리 창출 때문에 병커에서 회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기관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숨통을 틔워줘야지요. 선진화에 있어서 인원 감축 문제의 숨통을 틔워야 됩니다. 그것을 목줄을 쥐고 있으면 인턴 안 되지요. 나갈 사람 불안하니까 청년인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우하겠습니까?

더 가공할 문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정부부처 있지요, 정부부처,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인턴 중도탈락률이…… 지금 46.2%가 중도 탈락합니다. 행정인턴 한다고 7192명 뽑아 가지고 50%, 반토막이 중도 탈락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 중도탈락에는 취업을 하는 인원을 뺀 겁니다. 취업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2081명이 재취업 됐으니까 중앙부처만 따지면 29%정도가 재취업이 되고 중도탈락자가 47%입니다.

장관님!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조원진 위원** 행정인턴 안 해야지요. 이러면 뭐 하러 행정인턴을 합니까, 그냥 놔둬도 중도탈락하고 그냥 있을 사람들인데?

지자체 한번 볼까요? 지자체는 중도탈락자가 12.6%고 취업자가 26.3%입니다. 지자체가 오히려 청년실업에 대해서 대책을 제대로 쓰고 있지 중앙부처……

이것, 장관님께서…… 제가 하잖아요, 노동부가 마피아가 되고 있다니까요? 장관님께서 당에서 가셨기 이것 바뀌야 됩니다.

노동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앙 부처가 말이지 이렇게 청년인턴들 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들 보고 모럴해저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말한 기업들 있는 돈을 어떻게 환원을 할 수 있냐 그것입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릴까요?

○**조원진 위원** 제가 이것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조원진 위원** 마무리할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해서…… 정부가 술선수범하고 대기업이 술선수범 해야지 고용 문제가 해결이 되지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저는 정말 고용노동부로 전환을 해도 효과가 없으면 그 문제는 노동부 전체 다 또 우리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전체 다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극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정책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행정인턴이나 정부 공공기관에서의 인턴 제도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중도 탈락률이 높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민간 기업들에 비해서 청년인턴들에게 여러 가지 직무를 부여하고 훈련시키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한 게 굉장히 현장에서 나타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중소기업들은 청년인턴제를 활용해서 실제 좋은 인력들을 많이 채용하는, 그래서 한 80% 이상이 청년인턴제 과정이 끝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는 그런 대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인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해서 불필요한 행정부에서의 인턴 제도는 가급적이면, 정말 일손이 필요하고 또 청년들도 가서 현지에 정착하는 이러한 중소기업 청년인턴 제도로 전환토록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런 방향 하에서 지금 제도를 좀 저희들이 검토하고 손질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제가 한마디 더 드리면 이렇게입니다.

지금 청년인턴들을 고용에다가 합산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청년인턴 해 가지고 대부분 중간에 내보냅니다. 오히려 대기업들의 모럴해저드를 더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렇지 않고 정부 부서가, 중앙부서, 지방자치, 공공기관

등 정부 부서가 딱 목표 퍼센티지를 정해서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목표 퍼센티지를 15%면 15% 딱 정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정해서 추진하고 기업들한테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전반적인 고용이 창출되지 이 상태로 대기업들은 청년인턴들 다 모아 놓고 중간에 나가도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왜? 고용에 대한 발표만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가는 것에 대해 발표하는 대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총량제를 하자는 겁니다. 고용총량제를 해서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고용총량제를 해야지만이 기업들도 참여하고 정부 부처들도 같이 발맞춰 가서 노동에다가 고용을 붙인 그게 더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선택 위원님이십니다.

○**권선택 위원** 권선택 위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했는데요, 상당히 지연해서 구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야가 3 대 3 비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시 논의될 때 저희 자유선진당, 저희 당의 입장을 위해서, 제3당 아니겠습니까? 한 명을 늘리든지 해서 포함시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양당 간사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됐던 사항이고 위원장님께서도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증원하든지 조정하든지 해서 저희 당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예.

○**권선택 위원** 장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권선택 위원** 노동부가 이제 고용노동부가 되지 않습니까? 언제 되나요, 이달에 되나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저희들 희망은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행정부 내의 절차를 거쳐서 한 6월이나 이 정도쯤에는 출범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권선택 위원** 발전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

다. 아까 보고서도 나와 있지만 단순하게 이름만 고쳐서는 안 되겠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렇습니다.

○**권선택 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권선택 위원** 그런데 이러한 기능은 각 부처에 다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어떻게 통합을 하고 조정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임태희 장관님께서 상당히 소위 실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부처 간에 있는 고용정책에 대한 조정, 특히 그에 수반되는 예산 조정의 문제 또 사후 감독의 문제, 진단 평가의 문제, 이런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인 틀로 가져가서 정책 목표를 수행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우선 제도적으로 이번에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바꿈과 동시에 고용정책에 대한 총괄 기능을 저희 노동부가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통과가 된다면 이제 당연히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인력 수급에 관한 커다란 업무에서부터 구체적인 고용서비스 업무까지 저희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권선택 위원** 고용정책을 총괄을 하되 각 부처에 기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각 부처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저희들이 중복이나 혹은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택 위원**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조정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가져가겠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회의체로 대통령께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 회의와는 별도로 행정부처 내에서 이것이 제도로서 시스템화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권선택 위원** 과거에 보면 R&D 기능이 이랬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권선택 위원** 정부와 과학계 일부가 총괄해 가지고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없잖아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저희들이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정책에 대한 조정은 하는데 예산에 대한 것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권선택 위원** 정책에서 예산이 빠지면 그것은 사실 전용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 명심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권선택 위원** 실질적인 조정권이나 지도권이 있을 때는 예산까지도 포함한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노동부가 직원의 기강 문제, 비리 문제,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통계를 받아 봤더니 1년에 10여 건이 나와 있네요. 18건이에요, 18건. 뇌물수수, 부동산 사기, 재물손괴, 음주운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많지 않아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저희 노동부 직속 직원이 한 60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숫자는 다른 부처에 비해서 총 인원이 많기 때문에 좀 많게 나옵니다. 그러나 비율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권선택 위원** 특히 제가 작년 노동부 국감 때 고용지원센터 청사 매입 관련해서 상당히 지적을 했거든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권선택 위원** 특정 중개인이 모든 매입을 독식하는 문제 또 퇴직 공무원을 비롯한 노동부 공무원의 개입 의혹,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고가 터졌더라고요, 보니까요. 있었지요? 사무관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있었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권선택 위원** 그런데 국감 이후에 상당히 조치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예방됐을 것 아닌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대상자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고요,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청사 매

입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부적인 청사 매입 과정에 대해서 아주 투명한 절차로 또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업무 매뉴얼을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선택 위원 매뉴얼 개선된 것 제가 받아 봤거든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권선택 위원 주로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하라’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주로 바뀐 게 ‘물색 단계에서부터 컨설팅 업체, 공인중개사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라’ 이 내용입니다. 일반 원칙 아니겠습니까? 뭐 특별히 바뀐 게 있나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공정한 기회라는 게 그냥 주먹구구로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자기 편한 대로 하면 여기서 발생했던 좋지 않은 이런 사건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개적으로 그런 절차를 진행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권선택 위원 노동부의 태도가 아주 소극적이라는 것이 내부 문건에 나와 있어요. 내부 문건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사 매입 사업은 2008년도에 종료되어 매뉴얼 보완의 실효성은 크지 않으나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을 시정하여 매듭짓는 의미가 있음’ 이런 정도입니다. 갖고 있는 인식의 태도가. 이게 맞습니까? 순수하게 국회의원이 지적하니까 처리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정도예요, 지금. 내부 문건에 나와 있어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어쨌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이번에 반영해서 매뉴얼을 개선하는 거다……

○권선택 위원 실질적인 개선 노력은 없이 그저 그저 지적하니까 어떻게 급급해서 막아 보자 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앞으로 이런 건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요. 저희가 내부 감사 기능을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선택 위원 예,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분권 해야 되겠지요. 다만 어떤 업무를 할 것이냐, 과연 분권을 해도 지방이 수용 태세가 되어 있느냐, 그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거

든요.

그런데 여러 위원들 지적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여성고용 문제가 있더라고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그런 것도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지금 있습니다.

○권선택 위원 이것은 좀 시기상조 아닌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

○권선택 위원 2006년에 도입이 됐는데요, 이 정책 때문인지 몰라도 그동안에는 여성 근로자 비율이 30.7%에서 34% 또 여성 관리자 비율도 10.2%에서 14.1% 이렇게 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잘되어 가고 있는데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가 뭐냐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매년 직종·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여성고용 목표 등을 노동부에 제출해서 여성고용 확대를 유인한 제도입니다, 이 정책이. 그러니까 지방에 주면 과연 되겠느냐? 또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기업하고 상당히 근접하여 있거든요. 상당히 안 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이제 여성고용 문제는 커다란 대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지방이 담당하면 지방이, 이 부분이 그동안 중앙정부에 비해서 많이 미진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여성고용 비율을 스스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수적 효과도 있을 테고요. 여성고용의 여러 가지 환경 조성이나 정책 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끔 뒷받침하는 업무는 또 중앙에서 중앙대로 하니까요 저는 지방과 중앙이 협조해서……

○권선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 이게 여성고용정책의 핵심적인 업무예요, 부수적인 업무가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좀 따져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말씀 주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권선택 위원 나머지 서너 건 있는데요 이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김재운 위원님이십니다.

○김재운 위원 김재운입니다.

장관님, 산과 들에는 산수유꽃, 목련꽃,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있고 피어 있지만 일을 너무나 하고 싶지만 일을 못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아직도 겨울인 것 같아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말이 바로 이럴 때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고용’을 붙여서 고용노동부가 된다고 해서 일자리가 더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지요. 그러면 고용노동부가 되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일자리 창출의 우선 첫째는 기존의 일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빈 일자리 대책인데 그것은 저희 노동부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역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또 일감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제 전체의 차원에서 또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부분을 성장시키는 경제성장 전략 차원에서 해결을 할 수 있고요.

역시 일자리 창출도 지방과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또 그 지역 인구 구성의 특성에 맞는 어떤 일자리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일감의 개발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사민정 협의체 또 사회적 기업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지방이 좀더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체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현 정부 들어서 경제성장이 일자리 늘린다,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이 유일한 일자리 정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관되게 일자리 정책을 펼쳐 왔는데 일자리는 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더 심해지고, 그리고 청년실업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것 어떻게 뭐 해법이 없는 겁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동안에 고용지표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들어서는 아까 업무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문의라든가 이런 면도 대체로 통계가 아주 개선되는 조

짐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늘어나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이란 말입니다. 줄어드는 일자리는 정규직,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어들고 불안정한 일자리는 늘고 있다, 이것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지금 말씀하시는 측면에서 문제가 지적되는 경우도 있는데 흔히 기간제라든가, 그러니까 상용직 일자리도 같이 늘고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지만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통칭하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유연한 근무 형태로 일자리가 생겨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시간 근로가 상용화되어서 일자리가 된다는가 또 실제로 단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를 원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흔히 통계상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내용을 전부 부실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결국 고용의 질은 더 악화되고 있고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고 그런 실효성 없는 일자리 정책들이 결국은 양극화를 더욱더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실효성 있고 질 좋은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저희가 더 많은 일자리 또 일자리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일자리로 가자, 더 좋은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 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청년실업 문제가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것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김재운 위원 괜찮다니요? 매우 심각한데……

○노동부장관 임태희 스페인 같은 데는 40% 가까이 됩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통계를 정확히 읽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것은 통계를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도…

○김재운 위원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의 청년실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앞으로 고용노

동부장관이 되실 분이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면 안 되지요. 지금 청년실업의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통계를 제가 숫자를 정확히 보면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윤 위원** 지금 청년실업의 문제는 어느 정도냐면 청년 NEET가 100만 명이 넘고 있는 상태고요,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취업 애로를 겪는 층이 될 만큼 어려운 상태예요.

그런데 정부는 청년실업이 청년의 높은 눈높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현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기업의 수요와 청년들의 눈높이가 차이가 많은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이것은 청년들에게 청년실업의 문제를 떠넘겨서는 안 되고요.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청년실업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법은 청년들한테 눈높이 낮춰라 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더 청년들에게 갈만한 직장으로 발전하고 변화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서 중견기업 대책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재윤 위원** 프랑스의 청년고용 사회계약제라든가 벨기에 로제타 플랜 이런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청년고용의무제를 도입한다든가……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지금 아마 청년고용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저희들 장애인 고용하듯이 이렇게 하는 문제를 아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의 경우에는 청년까지 강제로 그렇게 기업한테 할당하는 것은 그렇게 적극 검토하고 있지 않은 정책입니다.

○**김재윤 위원** 청년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청년실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고용노동부가 마련하셔야 할 겁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그래서 청년들의 경우에는 역시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세계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발전해 나가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지나서 대기업으

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지금 죽음의 계곡이라 불릴 만큼 어려운 여건에 처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이제 정말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서 그 기업과 함께 스스로 대기업으로 커나가듯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요. 그 정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야말로 과거의 대량생산 제조업 중심의 이런 분야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근의 여러 가지 지식산업이라든가 또 아주 창의적인 서비스 산업이라든가 하는 쪽으로 좀 눈길을 돌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보다 더 창의적이고 보다 더 좀 지식산업 분야로 돌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우리나라의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25.6%입니다. 2007년 기준입니다. 벨기에나 스웨덴은 6.3%, 6.4%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의 고용시장이 양극화되고 있고 또 비정규직의 양산과 저임금 노동자들이 양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노동부가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가 한쪽으로는 기회이면서 한쪽으로는 굉장히 저희를 힘들게 하는 사항인데 바로 인근 국가에 아주 저임금의 이런 산업구조를, 튼튼한 산업구조를 가지면서 우리와 경쟁하는 국가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와 경쟁되는 국내 산업의 임금을 이렇게 좀 저임금 상태에 머물게 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근린공립화라는 용어로 그 내용을 설명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더 세계경쟁에서 정말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히든챔피언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오게 하고 다른 나라하고는 다른 일종의 창조적인 이런 분야에서 청년들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쪽으로 저희가 정책을 더 이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규모나 상태 파악하고 계신가요?

○**노동부장관 임태희** 사내하도급 문제요, 예.

○**김재윤 위원**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정확한 상태파악 안 되어 있지요? 저희가 안 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으니까,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보호대책 시급하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보호대책,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지난번에 우리 현대 관련 판결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챙겨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최저임금 문제하고 산업안전, 고용, 차별개선 등 노동부 사무의 지방이양 결정의 문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후의 몇 가지 문제를 서면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동부에 대한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추가질의하면 안 됩니까?

추가질의 논의가 없었나요?

○**委員長 秋美愛** 지금 시간이……

오후에도 환경부 소관의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예, 그러면 홍희덕 위원님.

5분 넣어 드리세요.

○**홍희덕 위원** 장관님,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요?

○**홍희덕 위원** 예, 이걸 노동부가 454억 6700만원, 지방비 등 합쳐서 총 1160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83개 지역에 8352세대의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건립한 사업인데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이고 임대의무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여 분양 전환할 경우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노동부의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지침과 국토해양부의 근로자주택 공급 및 관리규정에 따라 제대로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좀 살펴 주시고요. 현황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예,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근로여성 임대아파트에 대해 본 위원이 서면으로 질의한 바 있습니다.

2008년 12월에 노동부장관이 승인한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매각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검토를 했더니 임대주택법에 위배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노동부의 위법한 매각추진 때문에 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장관께서 꼼꼼히 좀 살펴보고 검토하시고 시정할 것은 좀 시정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장관님?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아까 파견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견업무 확대는 노사 간에 이견도 첨예하고 특히 합법 파견보다는 법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파견이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 파견업무 확대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기왕에 김상희 위원님께서 제출한 개정안도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시행하실 때 상임위에 보고하시고 검토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12쪽에 보니까요, 민간부문의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자가 확산되도록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성노동자를 염두에 둔 것이 맞겠죠?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런 수준으로……

○**홍희덕 위원** 노동부가 2010년 3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성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여성이 2009년에 57.2%에서 올해는 60.4%, 3.2포인트나 늘어났고요. 남녀를 합쳐도 성차별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이 2009년 47.1보다 올해 48.5%가 더 높았습니다. 임금, 승진 등에서는 차별이 심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회원국 가운데 남녀의 임금격차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런데 단시간 근로자로 또 만들어 가지고 더 임금을 차별화, 심화시키는 것 아닌가, 여성의 고용률이 낮은 원인이 보육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를 사회에서 책임질 계획은 세우지 않고 단시간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책임지라는 것은 너무 구시대적 발상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미 직장 내 남녀 간의 차별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이고 여성노동자의 3분

의 2가 비정규직 아닙니까?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까지 하는데 뭐 어떤 사용자가 단시간 정규직으로 쓰겠느냐,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이 정책은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이것 안 하는 게 오히려 좋다, 폐기하는 게 좋지 않으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임태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노동부도 콜센터에 4.5시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면담을 해 보니까 직무의 그 집중도도 높고 굉장히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제 전일근무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시간제 근로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본인들이 만족하게 근무하고요. 경쟁률이 28 대 1이나 될 정도로 이렇게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양한 근무형태를 만들어서 결국은 근로자가 자기 사정에 맞는 근로를 선택하도록 하는 그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노동부에서는 그런데 민간 사용자들이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의문이 가는 겁니다.

○**노동부장관 임태희** 예,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가령 집안 내 혼자 일을 한다고 그러면 전일근무를 원합니다, 물론 그 경우에는. 그런데 가령 맞벌이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이렇게 단시간 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오히려 이런 제도를 더 확산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도 현장에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노동부에 대한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이두아 위원님, 박준선 위원님, 이화수 위원님, 원혜영 위원님, 권선택 위원님, 강성천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 홍희덕 위원님, 김재윤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으로부터 각각 서면질의가 계셨습니다.

노동부장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초반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님들간에 그동안 조금 걸끄러웠던 점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이어서 원만하게 회의진행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노동관계법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업무보고에는 아주 간략하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노동조합법이 탄생된 것은 우리 노동부에 대해서는 13년간 묵은 어떤 법에 대해서 하나의 준칙을 새롭게 마련했기 때문에 그 법 통과로서 노동부가 할 일을 다 했다가 아닙니다, 결코. 아마 이 문제는 하나의 그 새로운 프레임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또 시행령을 바탕으로 해서 근로자면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장과 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8회의 소위를 개최하셨다 되어 있고요. 전체회의 여덟 차례, 소위와 공익위원 회의를 합쳐서 모두 23차 회의를 개최하셨으면 거기에서 어떤 것이 토론이 되었었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진단과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또 노사 간의 반응은 어떤지에 대해서 소상한 업무보고가 있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하나의 그 갈등이 너무 전면에 노출되다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못한, 공유가 되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위원장 혼자서 중재안 꺼내 들고서 어떻게 해 버린 것처럼,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노가 동의를 한 것이고 사가 이해를 한 것이고 노사가 절대로 그 절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노동부도 어떻게 해 볼 수가 없고 우리 위원회도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간략한 보고는 대단히 유감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만큼 석 달을 우리가 회의를 못할 정도로 많은 숙고와 번민을 하셨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오늘의 질의의 많은 시간을 차지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다는 것은 또한 우리 위원회

에서 많이 좀 성찰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바라보는 노사의 눈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에 미흡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성천 위원님과 홍희덕 위원님 또 이찬열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중앙권력의 지방이양 문제의 주제가 될 수 없는 산업안전보건기능의 지방이양을 성급하게 정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여야 간에 모두 문제 있다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집행 기능이 더 많습니다, 현장에 더 밀착돼 있고. 집행부서의 특징은 양적 성장을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경쟁을 할 것이고 또 계층적으로 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성과를 추구를 하고 주문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산업안전이 가장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중앙정부가 통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준칙을 마련해 주고 하는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산업안전 표준이 확립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절대 권력 이양에 적합하지 않고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행정작용과 행정법, 경험에 의해서 우리나라 하나의 준칙인데 그것을 어떻게 지방 이양의 대상에 포함시켰는지 우리들은 대단히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모으셔서 가지고, 오늘 회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법안 심사 대체토론 이전에, 한 내일 정도에라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반대하겠다 하는 논의를 모아 주시면 위원회 의결로서 채택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금 이 부분 문제 있다라고, 오늘 특별히 우리 위원회의 상임위 전체회의와 겹쳐서 우리가 지원을 못 나갔습니다만 강성천 위원님과 이화수 위원님, 홍희덕 위원님 그리고 양대 노총이 함께 주최를 한 산업안전보건기능 지방 이양의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우리가 경청해야 될 좋은 주제였고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겹쳐서 회의하는 바람에 관심을 못 기울인 데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한번, 요

점을 가지고 제시를 해 주신다면 위원회 의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석하신 산하기관장님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3시 정각에 개의하도록 하며 환경부 및 기상청의 업무보고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委員長 秋美愛**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노동부 업무보고에 이어서 환경부 및 기상청의 업무보고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두 기관의 보고를 모두 청취하고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일괄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두 기관은 요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만의 환경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존경하는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환경정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환경부 업무계획과 최근의 주요 환경 현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세계적 경기침체의 여파로 지난 2년간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경제는 국민의 단합과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국운 상승과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 국정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가져다 준 천안함 침몰 사건과 대북 정세의 불안정

등은 회복하는 우리 경제에 시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의 모든 직원들은 긴장감을 가지고 맡은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는 금년도에 ‘환경·경제·사회가 융합된 녹색한국’을 환경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4대강 창출’, ‘자연자원 보전과 현명한 이용’, ‘자원순환형 사회 정착’, ‘탄소다이어트 2030’ 등 열 가지 정책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업무계획은 잠시 후 자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환경부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녹색한국 건설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 정부의 최대 정책과제 중 하나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수질 및 수생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리 사회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이며 동 사업의 성공 여부는 이러한 환경 성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의 본질은 환경 사업이면서 따라서 환경부의 사업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친환경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는 동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 왔습니다. 어제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은 온실가스 관리의 총괄 기능이 정부부처 중 환경부에 부여된 것입니다.

법이 부여한 이러한 기능을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조직의 미래와 국가의 녹색성장이 좌우된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저와 환경부 모든 직원들은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 구축과 환경조직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충남 지역 석면광산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영향 조사 결과의 후속 대책과 시멘트 소성로의 환경관리 개선 사항도 함께 현안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환경 현안을 환경부가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업무 및 현안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환경부 간부와 외청장 그리고 소속·산하기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간부입니다.

제일 먼저 문정호 차관을 소개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는 정부인사발령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차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차관회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차관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참석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홍준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부인사발령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기획조정실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준석 전 환경정책실장의 후임 인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환경정책실장은 공석 중입니다.

다음은 김지태 물환경정책국장입니다.

다음은 정연만 자연보전국장입니다.

백규석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윤종수 기후대기정책관입니다.

안문수 상하수도정책관입니다.

직제상으로 녹색환경정책관 소개 순서입니다. 이는 오늘 업무 관련 회의로 인해서 조금 늦게 참석하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오종극 환경보건정책관입니다.

김진석 대변인입니다.

다음은 유복환 감사관입니다.

김찬우 국제협력관입니다.

다음은 외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병성 기상청장이 인사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는 현재 한·아프리카 기상 협력을 위한 해외 출장 중이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박광준 기상청 차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1차 소속기관장이 되겠습니다.

김원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를

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정기, 바로 분쟁을 조정하는 제정회의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참석하십니다.

오늘 여러 사람이 지참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승준 국립환경과학원장입니다.

김종천 국립생물자원관장입니다.

이필재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입니다.

(간부 및 소속 기관장 인사)

다음 산하기관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입니다.

엄홍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조춘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입니다.

또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김상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현재 한·브라질 환경협력을 위한 해외출장을 24일까지 예정으로 나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한승호 환경산업이사가 참석했습니다.

(산하기관장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양해해 주신다면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환경 현안의 상세한 내용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그렇게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준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기획조정실장 홍준석 기획조정실장 홍준석입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에 금년 1월에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을 통합해서 정원 2165명의 한국환경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다음 2010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은 4조 4832억 원으로 2009년도보다 11.3% 증가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같음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생명력이 넘쳐흐르는 4대강 창출 등

9개 과제를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생명력이 넘쳐흐르는 4대강 창출 과제입니다.

먼저 4대강 살리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환경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신규 인공 생태습지와 어도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방류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폐수·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하수처리시설의 총인 화학적 처리시설을 1조 3000억 원을 투자해서 보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질변화와 오염원을 연계해서 상시분석·평가·예보를 위한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수질오염방제센터의 인력을 확충하며 수질자동측정망과 이동형 측정장비, 오염원 원격감시체계 등을 활용해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준설구간에 포함되거나 수위 변동의 영향을 받는 취수시설을 공사 전에 이전 또는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기존 4대강 환경평가단을 사후관리조사단으로 개편하여 사업자의 이행사항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셋강·실개천 수생태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훼손이 심한 지방하천을 우선 복원하고 하천별 깃대종 지정·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천 등 건천화·복개된 도심하천을 복원하는 청계천+20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 중에 9개소를 착공하겠습니다. 농촌마을 도랑·실개천 살리기 확산을 위해 기업·NGO 등과 함께 1사 1하천 복원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물벼룩 등을 이용해서 미지의 유해물질까지 관리하는 생태독성 관리제도의 내년도 시행을 준비하고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는 내년도부터, 한강 수계는 총량제 의무제 전환 시점부터 총인에 대한 오염총량제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상하수도 서비스 고도화 과제입니다.

현재 164개로 쪼개져 있는 수도사업을 2020년까지 30개 이내로 광역화하여 수도사업의 경영효율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는 전남권과 경북권, 강원 남부권에 대하여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아울러서 누수진단과 블록시스템 등 과학적 상수관망 정비로 유수율을 2014년까지 82.6%로 제고할 계획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

정·시행을 통해서 빗물, 중수도 등 물의 효율적 재이용 기반을 마련하고 하·폐수를 재처리해서 공업용수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로 재이용하겠습니다.

취약지역·서민층 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농어촌지역의 상하수도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2013년까지 72%, 하수도 보급률은 2013년까지 68%로 각각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가 가구 등 서민층에 대하여 옥내급수관 개량 및 수도분기관 연결을 무상지원할 계획입니다.

토양·지하수오염 관리 강화를 위해서 군부지, 산업단지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국·공유지에 대한 조기 정화철차를 마련하고 토양 및 지하수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측정망의 연계나 오염정보시스템의 결합 등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자연자원 보전과 현명한 이용입니다.

도시 녹지 및 친수공간 확충을 위해서 개발사업에 대한 생태면적률 적용을 확대하고 녹색길 조성 등 도시 내외곽 녹지요소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생태계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지질공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립공원 생태계 복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국립공원 구역의 조정과 사찰 지원, 도시 인근 국립공원의 둘레길 조성 등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DMZ의 생태계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다음달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태관광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을 선정하고 생태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생태관광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자연환경해설사를 금년 말까지 200명을 육성하고 국립공원 바우처제도와 U-생태관광시스템 구축 등으로 생태관광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생물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생물다양성기본법 제정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유전자은행을

설치하고 유전자원 국제레짐에 대한 적극 대응을 통해서 생물주권을 확립하고 BT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자원순환형 사회의 정착입니다.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 전망치 대비 20% 저감을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제도를 무상·정액 방식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개편하고 수거수수료의 합리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주시 RFID 기반 수거시스템 등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해 나가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뷔페 등 발생원별 특성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을 추진하면서 반찬 수를 최적화한 고품격 메뉴·식단과 소형·복합찬기를 보급하고 그림으로 인해서 잔반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물 규격화·포장화 및 저온·반가공 상태의 유통 확대를 통해서 식재료 유통 및 조리과정의 쓰레기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일환으로 봄맞이, 휴가철 등 국토 대청소 활동과 함께 명절의 생활·포장·도로변 쓰레기 비상대책 등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정화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자체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청소 대행비용의 원가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대행계약 및 지출내역 공개기준 마련 등 청소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정 내 폐의약품의 회수·처리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하여 지역 단위 폐자원 순환망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기관을 확대하면서 공공기관의 재생아스콘 사용을 의무화해 나가겠습니다.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본격 추진하며 폐휴대폰 100만 대 수거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라 대량폐기가 예상되는 브라운관TV 재활용 대책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과제, 2012년도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 계기 환경선진국 도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계자연보전총회(WCC)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총회 개최를 위한 로드맵을 금년 6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2012 WCC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하겠습니다. 한국방문의 해, 여수엑스포 등과 연계한 외국인 생태관광 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제주도를 생물권보전지역 및 세계자연유산에 이어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세계 최초의 유네스코 보호제도 3관왕 달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분야 국격 향상 대책입니다.

먼저 환경규제 선진화를 하겠습니다.

공장 입지규제를 총량제를 전제로 해서 자연보전권역은 면적 기준에서 부하량 기준으로,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배출량 기준에서 부하량 기준으로 전환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기특별대책지역의 경우 배출시설 규모에 따른 입지규제를 폐지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사업장 인수·합병시 배출총량 한도 내에서 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업종별로 합리화하고 인허가 이후에 재인허가하는 폐수배출시설 신인허가제도 도입방안도 금년 말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평가의 초기단계에서 평가 여부와 강도 등을 유연하게 결정하는 스크리닝제도 도입기반을 준비하고 국내 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를 위해서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생산·평가·등록하는 한국형 REACH제도 도입과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 공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환경선진국 도약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글로벌 환경이슈를 선도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국제적 평가에 활용되는 환경 분야 지표를 개선하고 녹색성장정책 성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국제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감축행동 등록부 제안의 구체화, 기후변화 코펜하겐 후속 협상에 적극 대응하면서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환경-경제 통합을 위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주에 개최되는 제4차 B4E 행사 그리고 제32차 IPCC 총회 그리고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치 등을 추진하고 서울이니셔티브사업을 아태지역에서 아프리카·중남미 지역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개도국과의 환경협력 MOU 체결 등 지역 및 양자 환경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국제환경기구 의무분담금 체납액을 최소

화하면서 의무분담률을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점진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과제는, 우리나라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저개발국에 전수하여 환경역량을 강화하는 과제입니다.

개도국의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맞춤형 국제공동 환경기술 개발과 개발기술의 현지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사업으로 수질·폐기물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환경공무원 및 기능인력 300명에 대하여 수요자 맞춤형 초청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국내 환경산업 해외진출과 연계한 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규모를 2012년까지 1500만 불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차세대사업의 성과를 계승해서 2011년부터 추진할 에코-이노베이션(Eco-Innovation) 기술개발 사업계획을 금년 6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체에 대해서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과 창업·보육, 시제품 생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남권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환경산업복합단지 2014년까지 건립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기업 및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녹색경영 확산을 위해서 녹색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주요 공공기관별 녹색경영 실적을 평가·공개하고 병원, 대학 등 사회서비스 분야 녹색경영 평가기준을 개발·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국민건강 위해물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석면·나노물질·분진·라돈의 관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안아파라(ANAPARA)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에 이어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으로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을 완비하고 농어촌 노후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처리 지원을 위해서 관계 부처 합동관리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유통 나노물질에 대해서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나노물질에 대한 독성정보를 생산·공유하겠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미세먼지 PM_{2.5} 대기질 환경기준안을 마련하고 시멘트공장 주민 건강조사와 석회석광산 주변지역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라돈지도 작성을 하고 건축자재 라돈 방출 평가 및 라돈 차폐시공 시범사업을 실시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환경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함유 실태조사와 유해 어린이용품 리콜제도를 강화하고 프탈레이트를 함유한 유해 어린이용품의 유통을 차단시켜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안심놀이터와 보육시설, 유치원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아토피 에코케어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아토피 전문 환경보건센터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새집·헌집증후군 제거를 위해서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를 확대하고 독서실·학원·PC방·보육시설 등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진단·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폼알데하이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방출량 정보표시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환경보건정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국민건강 영향을 추가하는 건강영향평가제도 시행을 통해서 국민건강 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고자 합니다.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환경 중 잔류 의약품물질 위해성 평가 등 환경보건 조사·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고온소각처리 등 PCBs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스톡홀름협약에 따른 신규 대상물질의 관리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G20 정상회의 대비 화학사고·테러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울·부산지하철 석면뿔칠 제거 및 환기설비 개선 등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탄소다이어트 2030사업입니다.

미 퍼스트(Me First) 운동을 부문별로 전개합니다.

가정 부문에 있어서는 전기·수도·가스 등의 절감량을 온실가스로 환산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본격 추진하고, 건물 부문에 있어서는 공공건물 환경성 인증을 의무화하고, 상업 부문에 있어서는 지자체 녹색구매조례 제정과 탄소성적표지제도를 확대하고 그린스토어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교통 부문에 있어서는 천연가스차, 하이브리드차,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실증사업 및 시범 보급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9페이지, 녹색생활 홍보·교육을 위해서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 확대,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서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Me First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가정·상업시설·사무실 등을 방문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진단하고 감축방안을 컨설팅해 주는 그린리더 육성을 금년 중 1만 명 육성하겠습니다.

유아부터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군인까지 사회 진출 이전의 차세대에 대한 맞춤형 녹색성장 교육으로 녹색시민을 양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환경부 선도 녹색생활 실천을 해 나가가고 합니다.

LED 전등 5000여 개를 교체하고 전기제품 전원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로 낭비 및 대기전력을 최소화하면서 자동차와 야근이 없는 그린테이 운영, 화상회의 활성화, 쿨 맵시·온 맵시 운동, 그리고 빈 그릇 희망은행, 그린포인트제 활성화로 작년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하고 온실가스 179CO₂ t을 저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30페이지, 기후변화 대응기반 강화 부분은 현안사항에서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기후변화 감시·적응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극지기후변화감시소 WMO 지정, 지역기후모델 구축, 한국판 Stern보고서 작성 등 기후변화 감시체계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 자료 공유 및 협력 연구를 통해서 온도 변화, 태양풍 등 우주기상 예·경보 서비스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수변구역 매입토지 등에 에너지 수종을 식재하여 경관 창출, 수질오염정화와 함께 탄소흡수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상하수도 시설을 소화가스·태양광·풍력·소수력 발전으로 에너지 자립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동시저감 개념을 반영해서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시설에 따라서 NO_x 배출허용 기준을 10~50% 강화하고 대기오염총량제 적용 대상을 2종 사업장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저속주행 차량에 대한 CNG 개조 추진과 원격 측정장치를 활용해서 운행 차 배출검사를 하는 그린패스 및 스마트 사인 시범사업도 금년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녹색성장 5대 선도지역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새만금을 녹색명품 새만금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새만금 전체의 21%, 면적 5950ha에 해당하는 생태환경용지 권역별 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농업용에서 친수용으로 전환된 새만금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기 수립된 수질개선 대책을 보완하겠습니다.

오염도가 높은 상류지역 하천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수도권매립지를 세계 최고의 환경명소로 브랜드화 하고자 합니다.

폐자원·바이오·자연력 에너지 타운을 조성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녹색유전화사업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모델로서 세계 최대의 매립가스발전소에 대한 CDM사업 추진으로 연간 약 70만CO₂ t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면서 약 100억 원의 이익금을 향후 10년 동안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환경에너지대학원 대학 설립, 그리고 에너지 생산·R&D·인력 양성을 융합하는 기술개발코어로 수도권매립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수도권매립지를 국제적인 환경관광명소로 브랜드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레포츠·바이오·생태공원 등 생태관광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골프·수영·승마장·요트장 등 레포츠 단지는 2014년 인천아시아 게임 경기장으로 활용을 해서 친환경대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단양권은 시멘트·석회석 산업, 지역 특산물 및 생활·산업폐기물 등을 연계해서 지역 특화 비즈니스모델을 고려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36페이지, 창원권은 생태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습지센터 조성, 따오기 복원, 또 우포늪을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육성하고 람사르 총회의 성공적 개최 경험을 토대로 해서 환경 분야에 특

화된 에코 컨벤션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육성·지원하고자 합니다.

강릉시는 세계적인 저탄소 녹색 명품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자전거 중심의 녹색교통, 신·재생 에너지, 물 재이용, 도시 경관의 녹색디자인 등 본 사업을 금년 10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기존 도시 녹색화 표준모델로 삼아서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4대강의 생명·환경을 살리기 위한 대책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쟁점사항 위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달성·함안보 퇴적토 중금속오염 우려 문제입니다.

달성보에서 검출된 비소 등 중금속 농도는 자연토양 수준으로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자연토양의 비소 농도가 0.56~20.58 mg/kg임을 감안할 때 8.48mg/kg로 검출된 오염 농도는 자연토양과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디클로로메탄이 수질환경 기준 20배를 초과했다는 주장은 공정시험법을 잘못 적용한 결과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수질환경 기준을 적용하려면 하천수를 직접 채수해서 측정해야만 하나 함안보 디클로로메탄 분석은 퇴적토에서 수분을 압축·분리해서 시험·분석한 것입니다.

다음, 준설 퇴적토 관리 대책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따라서 준설 시의 오염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퇴적토 조사를 실시하고 준설토를 활용할 때에는 2차적인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4대강 성토지역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지침에 따라 조사를 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토양오염 우려 기준 초과 시에는 세척법·열탈착법 등 토양오염 처리 후에 성토재 등으로 사용토록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준설 시 수질 악화로 인한 취수원오염 우려 문제입니다.

하천 준설 시 부유물질은 40mg/L로 홍수 시 부유물질 농도에 비해서 10분의 1 내지 20분의 1

정도의 낮은 수준입니다.

비소 등 일부 중금속 물질과 관련해서는 자연 상태의 하천에서는 중금속 용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취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대강 공사 시 취수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물막이, 흡입식 준설, 이중 오타방지막 설치 등을 통해서 부유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 취수시설 이전과 시설 보완, 원수의 측정주기 강화 등의 안전한 취·정수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시 퇴적토 조사가 부실해서 영향평가를 재실시해야 된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퇴적토의 표층만 조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준설 시행 전에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추가로 지침을 내렸습니다. 현재 추가적인 퇴적토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재실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1페이지, 4대강 보 설치로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보 설치와 함께 수질 개선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에 수질은 개선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보 설치 때문에 유속이 느려질 수 있지만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여 오염원을 차단하고 충분한 수량을 흘려준다면 수질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 예측 결과도 좋은 물비율이 06년 76%에서 2012년에 86%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울산 태화강이 보 철거로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울산 태화강의 수질이 개선된 주된 이유는 하수관거 정비와 환경기초시설 확충, 퇴적토 준설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순히 보 철거만으로는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42페이지,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단기적으로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4대강 살리기를 통해서 물이 풍부해지면 수생태계의 건강성도 증진될 것입니다.

한강의 경우 준설 이후 어류와 조류 등 생물종 다양성이 오히려 증가한 바 있습니다. 아울

러서 습지 원형 보전 및 신규 습지 조성, 멸종위기종 인공증식·방류, 어도 설치 등 4대강의 생태 기능을 향상시킬 계획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대강으로 습지가 훼손된다는 우려입니다.

철새 도래지, 하중도 등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는 원형 그대로 보전하면서 4대강 사업 이후 총 84개소의 신규 습지가 조성될 계획이며 하도 정비 시에도 1 대 5 이상의 완만한 경사로 하도를 정비해서 사업 이후 자연스러운 습지 생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단양 축부쟁이 보전과 관련해서는 한강 강천리섬 일대에 멸종위기종 단양 축부쟁이가 집중 서식하여 셋강 조성으로 서식지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공사 중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군락지에 이중 금줄과 표지판 등을 설치해서 공사 중 인위적 영향을 차단하고 서식지는 최대한 원형 보전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강천리섬 내에 대체서식지를 조성하여 이식하고자 합니다.

다음 44페이지, 4대강 멸종위기 어류 복원 대책입니다.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결과 4대강 본류 구간에 멸종위기 어류 8종 서식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고 멸종위기종 인공증식·방류와 어도사업을 통해서 어류 복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환경영향평가를 4개월 만에 성급하게 이행했다는 지적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성 평가는 2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한 이후에 하천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시 사전환경성검토 결과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가 소요기간에 사전환경성검토기간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검토서 작성이 낙동강·한강은 03년도부터, 금강·영산강은 07년부터 착수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5페이지, 석면광산 주민건강영향조사 후속 대책입니다.

석면광산 인근 주민 215명에 대한 건강영향 기초조사가 08년 4월부터 09년 4월까지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석면폐증 소견 55명, 흉막반 소견

87명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역 14개 석면광산 인근 1km 이내 주민에 대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4057명 검진 결과 폐암이 7명, 석면폐증 소견 179명, 흉막반 소견 227명이 확인된 바가 있어서 지난 4월 초에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충남 외 지역 7개 석면광산과 2개 석면 사용 공장에 대한 주민건강조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은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환 소견 주민들에 대해서는 추가 정밀진료 실시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정상으로 판명된 주민들도 석면질환 발병 여부를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영향조사 지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석면광산 조사 대상지역을 반경 2km로 확대하고 장기 거주 후의 이주민도 대상에 포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석면피해구제법 하위 법령을 금년 10월까지 제정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피해 구제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녹색법 시행령 제정 후속 조치입니다.

녹색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정부 기능 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인벤토리는 부문별 소관 부처가 소관 분야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업·산림 분야는 농식품부가, 에너지·산업 공정 분야는 지경부가, 폐기물은 환경부가, 건물·교통은 국토부가 통계를 작성하고, 환경부는 총괄 기관으로서 부문별 통계를 취합·검증하고 대외 대표 역할을 수행토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에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관리하는 사업장 목표관리제에 있어서는 환경부가 총괄 기관으로서 종합적인 지침·기준을 마련하고, 부문별 관장기관의 사무를 총괄 평가하면서 검증기관을 관리하도록 기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각 부처는 아까 말씀드린 부문별로 관리업체 지정과 이행계획 및 실적 평가,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50페이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 관리체계 및 사업장·공공기관 등 배출원별 인벤토리 구축·운영을 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환경

부 소속으로 두도록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는 연비 기준은 지경부가, 온실가스 기준은 환경부가 각각 정하되 기준의 적용과 관리는 환경부에서 총괄하여 관장하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환경부 소속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다음 달까지 설립하고자 합니다. 행정 인력은 최소화하면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실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제도 운영을 위한 통합 지침을 9월까지 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관리업체의 지정·관리 지침이라든지 명세서 작성·검증 지침, 검증기관 지정·관리 지침 등 총 8개의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금년 9월까지 목표관리제 대상 관리업체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체계에 있어서는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과 제재 근거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서 마련하고 온실가스-연비 선택형 단일규제 기준·절차를 환경부령으로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 후속 조치가 되겠습니다.

08년 국정감사 시에 소성로 폐기물 사용기준 부재, 인체 위해 폐기물 수입 대책 마련, 소성로 배출허용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듬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결과를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주요 대책 추진 상황입니다.

소성로 투입 폐기물 관리를 위해서 폐기물 사용·관리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사용을 금지하고 중급속 자율관리 기준의 설정과 운영, 함량 조사 및 정보 공개 등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자발적 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을 위한 투입 폐기물 관리실태 합동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재활용업 허가제 전환, 소성로 설치·관리 기준 도입, 폐기물 부적정 수입 규제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에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소각로와 같은 수준으로 소성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총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신설과

시멘트 사업장 비산먼지 배출기준 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제품 유해성 관리에 있어서는 국내 유통 시멘트 6가크롬 등 중금속 함량 조사를 매월 1회 시행해서 분석 결과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07년도에 비교해서 중금속 수치가 감소 및 안정화 추세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영월군 주민 건강영향조사 및 유소견자 진료를 실시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유소견자 및 직업력이 없는 진폐증 소견자 대상으로 해서 진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대책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 시까지 자발적 협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입 폐기물 반출명령제 도입, 수출입 폐기물 관리 포털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 유병자에 대한 진료 등 후속대책 추진과 함께 영월 지역 이외 시멘트 공장 등에 대한 주민 건강영향 조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붙임 자료는 4월 임시국회 심사 대상 법률입니다.

지금 임시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93건입니다. 정부 제출 법안 24건과 의원발의 법안 169건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점 심의를 희망하는 법안은 총 114건입니다.

다른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성 기상청장을 대신하여 기상청 차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전병성 기상청장은 한·아프리카 기상 관련 회의 참석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차장 박광준** 존경하는 추미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상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년도 기상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기상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9.9% 증액된 2470억 원을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폭설, 가뭄,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기상이변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국가적인 대책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기상예보 정확도에 대한 국민적 기대 수준과 기상정보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기상청은 2010년도 기상정책 목표를 '선진 예보 구현과 기후변화 대응 능력 제고'로 정하고 기상예보의 선진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하여 다섯 가지 주요 기상정책을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기상예보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상예보 정확도를 향상하고 국민 만족도를 증진시켜 신뢰받는 기상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기후변화과학 분야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능력을 향상시켜 상세 기후변화 예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범정부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셋째, 지난해 제정된 기상산업진흥법을 기반으로 기상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해상도 기상자원지도 제공과 기상조절 기술연구 강화로 실질적인 녹색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안개, 낙뢰 등 새로운 위험 기상에 대한 대비 능력을 강화하고 태풍과 황사의 예측 능력을 향상하는 한편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의 단계적 구축, 해양기상 서비스 강화로 국민 불편 해소와 안전을 최우선시하겠습니다.

다섯째, 통신해양기상위성의 성공적 발사와 운영, 레이더운영센터 설립, 관측시설 첨단화 등 기상행정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금년도 기상청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기상청과 산하 기관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청 주요 간부입니다.

켄 크로포드 기상선진화추진단장은 본인의 오클라호마 대학 석좌교수 퇴임식 참가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조하만 기획조정관입니다.

진기범 예보국장입니다.

엄원근 관측기반국장입니다.

박정규 기후과학국장입니다.

이현 지진관리관입니다.

최치영 국립기상연구소장은 기상청장과 함께 해외 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서애숙 국가기상위성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산하기관장입니다.

김병선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입니다.

(간부 및 산하기관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정책추진성과 평가, 금년도 기상정책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고, 입법계획과 주요 현안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지난해 정책추진성과 평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올해 주요 기상정책 실천계획으로 업무 추진체계와 다섯 가지 추진전략에 대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기상청은 2010년도 정책 목표를 선진예보 구현과 기후변화 대응 능력 제고로 정하고 기상예보 선진화, 기후변화과학정보 지원 확대, 미래산업 육성 지원, 위험기상 대비 능력 강화 등 4대 전략을 추진하겠으며, 4대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상행정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과 국민들의 고언과 질책을 교훈 삼아 올해에도 최우선적으로 기상예보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 도입된 세계 2위 성능의 영국 통합 모델인 슈퍼컴 3호기 기반으로 현업운영하여 수치예보모델 성능을 향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예보를 초단기예보와 접목하고 재해기상 전문예보관제 도입을 추진하여 예보 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또한 해양기상관측선 건조 완료, 지자체와의 공동협력관측소 확대 설립 등 기상 관측망을 보강하고 고품질 기상관측 자료 생산을 위해 관측장비를 첨단화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국민 만족도 증진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 중심으로 날씨변화 시나리오 정보

는 지난 2월 말부터 하루 2회 제공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산악예보 지점과 산 정상기온예보 지점을 확대하여 등산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날씨 위주의 서비스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크로포드 기상선진화추진단장이 제시한 10대 우선과제를 착실히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덕분에 금년 직제 개정으로 레이더운영센터는 지난 4월 13일부로 신설되었으며, 올해에는 10대 과제 중 예보관 훈련시스템 시연관 제작, 기상관측자료 통합관리와 서비스 지원을 위한 국가 통합 기후/수문자료관리 발전 계획 수립, 선진국 수준의 해양기상 서비스 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정확한 미래 기후변화 예측정보 제공으로 범정부적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한반도의 상세 기후변화 예측정보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제32차 IPCC 총회, 기후변화와 미래포럼 등을 개최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확산을 주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기후변화감시 요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선진국 수준의 기후변화감시 기술을 확보하고, 동아시아 지역 기후모델 구축,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 등으로 기후변화 예측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난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기상산업진흥법을 기반으로 기상장비 도입과 유지·보수 업무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화기상정보 개발과 산업기상지수 확대 제공 등으로 기상정보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 아프리카 지역의 개도국에 기상기술을 전수하여 국격 제고를 도모하는 등 기상기술 공유 영역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우리 민간 기상사업자가 개도국에 진출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난해 개발한 풍력-기상자원지도는 지난 3월 29일 ISO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태양-기상자원지도는

연말까지 전국 1km 해상도로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국토 개발에 따른 고해상도 기상영향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기상조절 기술이 조기에 실용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험 운영 중인 안개특보제가 조기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안개 예측모델과 가이던스 개발에 주력하였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대설특보 운영과 낙뢰 정보 서비스 확대 등으로 국민 편익과 안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태풍 5일 예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분석 절차를 마련하여 태풍 예측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6쪽입니다.

황사에 대한 감시와 예측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연구용 황사입자계수기와 황사감시기상탐을 추가 설치하고 통합모델에 기초한 사계절용 황사 모델 운영을 현업화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올해 초 발생한 아이티 지진을 교훈 삼아 2015년까지 지진 발생 후 50초 이내에 지진속보를 통보할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내에 지진분석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지진 조기경보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관측망 구성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해양기상 서비스 강화를 위해 서해안 취락지역에 파고계와 CCTV 등을 설치하여 연안 방재 관측을 실시하고, 연근해 파랑실황도, 항만기상정보 등 새로운 해양기상정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어민들이 기상청의 해양정보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기상정보의 정확도를 더욱 향상하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다이얼 부이 휴대폰 서비스를 개발하여 어민과 해양 레저객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네 가지 전략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기상행정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당초 2016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기상관측 표준화를 2012년까지 조기 달성하여 27개 관측기관의 기상관측 자료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기상선진화추진단장이 제시한 10대 우선과제 중 첫 번째 과제인 레이더운영센터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4월 13일자로 설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기상레이더센터를 통해 올해 안에 기상레이더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레이더장비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레이더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범정부 레이더운영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레이더 자료 공동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난해 발사 예정이었던 통신해양기상위성이 마무리 작업을 마치고 5월 중 성공적인 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신해양기상위성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성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지구 위성자료를 입수하여 예보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그린IT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모바일 오피스 근무 환경을 구축하여 신속한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P-USN 통합 관측시스템을 확장하여 기상 환경 생태 등의 공동관측 센서를 적용함으로써 예산의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정책 강화와 예보기술 선진화 등을 위하여 기존의 국립기상연구소를 국립기상과학원으로 승격 추진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직발전 방안을 만들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가능한 한 금년 내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우주기상 업무 수행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지진 감시, 지진해일 감시와 예측에 관한 규정 보강 등을 골자로 하는 기상법 개정안을 금년 하반기에 제출코자 합니다.

4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단기예보 정확도 향상 방안과 국격 제고 프로젝트 등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폭설과 같이 짧은 시간에 많은 피해를 주는 기상현상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6시간 이내에 위험 기상을 예측하는 초단기예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이더운영센터 신설로 범정부적으로 레이더 자료를 공동 활용하여 실황 강수 예측기술과 초단기예보기술을 개발하고, 초단기 분야 전문예보 관제 도입과 예보관 훈련시스템을 구축하여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정부의 국제협력 프로그램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상 분야 국격 제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상청의 기상기술력은 세계 9위 수준으로 이제는 기상기술 수혜국이 아닌 공유국으로서 개도국을 지원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베트남과 인도, 아프리카 등 10여 개 국가에 대해서 수문감시와 기후예측 역량 배양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연차적으로 국제기구 내 역할과 실효적 협력 강화 등으로 기상기술력과 대외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50쪽입니다.

5월에 발사 예정인 통신해양기상위성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주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 발생 대비를 위해 우주기상 예·경보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우주기상 업무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기상법을 개정하고, 우주기상 감시용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2015년에 서비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방법은 국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보충질의 없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박대해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박대해 위원 박대해 위원입니다.

먼저 장관님과 우리 환경부 간부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문정호 차관님, 승진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상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사업의 환경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드러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짚막하게 좀 답변해 주시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환경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결국 4대강 살리기의 결론이고 앞으로 국민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중점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환경부의 실국장 별로 한 군데 보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챙기고 관련 유역청 또는 지방청과 협력해서 환경적인 문제를 미리 손쓰지 못해 가지고 나중에 후회하거나 심한 비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 저 자신도 틈나는 대로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 문제점도 물어보고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우리들이 특별히 보호종으로 지정해 놓고 있는 동식물에 대한 관리 그리고 흙탕물로 인한 문제, 준설토가 갖고 있는 환경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저희 소관을 챙기고 있습니다. 다만 현 상태에서는 국토해양부가 4대강 추진 본부와 함께 챙기고 있는 이른바 공학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건설적 측면에서 좀 신경을 써야 하는 사항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올리겠습니다.

○박대해 위원 예, 예상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불거진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우선 한두 가지 말씀을 올리자면 그동안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준설토 문제가, 우리 하천 바닥이 퇴적되는 과정에서 주로

여름철, 홍수철에 어떤 물질들이 하천을 통해서 흐르다가 바닥에 퇴적되었느냐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다만 토양 오염 문제하고 수질오염 문제를 오락가락하는 그런 인식의 오류가 일부 있어서 토양오염 기준으로 보면 괜찮지만 수질오염을 만약에 그 정도로 이루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바로잡아 주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일부 공사현장……

○박대해 위원 간단히……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준설현장에서 말하자면 특수 보호종 등에 대한 인식이나 또는 판별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훼손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돌아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보면 일부 훼손한 사례가 한 군데, 예를 들자면 나오는 것과 같은 문제가 최근에 있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정부는 탄소배출량을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박대해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는 가운데 며칠 전에 장관님께서 ‘2012년에 탄소세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히신 적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탄소시장을 얘기했는데 그게 탄소세로 보도가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탄소세도 어차피 환경부 입장에서는 검토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박대해 위원 언젠가는 탄소세를 도입해야 될 그런 거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일부 기업에 부담을 주지만 도입은 해야 됩니다.

○박대해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에너지 세제는 탄소를 실제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석탄을 활용하는 산업이나 전기 등에 대해서 특별한 과세가 없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대해 위원 기획재정부를 비롯해서 산업계는

‘2012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박대해 위원 선불리 탄소세를 도입하면 기업과 가계에 부담을 주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좀 시기상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장관님도 그렇게 동의를 하시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저희는 지금 수준에서 철저한 준비 없이 도입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만일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에 서비스산업보다는 제조업, 그 가운데서도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등 에너지 소비가 큰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렇습니다.

○박대해 위원 더구나 경제위기를 막 벗어나려는 상황에서 탄소세 도입으로 자칫 경기가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장관님, 동의를 하시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습니다.

○박대해 위원 장관님, 현재 어느 나라에서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북구라과 몇 나라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덴마크라든지 스웨덴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세계적으로는 보편화가 안 됐고 영국이 도입할 계획입니다.

○박대해 위원 전 세계 온실가스의 20%를 배출하고 있는 미국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미국은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미국이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미국은 사실 교토의정서 체제에 8년간 들어오지 않은 까닭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추정이 됩니다. 아마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현재 상태에서 시행에 따른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대해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본의 경우에 올해 탄소세 도입을 시행하려다가 내년으로 연기한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의 경우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이런 의견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듯 유럽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세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현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만큼 온실가스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세 수입 가운데 환경 관련 세금 비중이 10.34%로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터키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서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선부른 탄소세 도입은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상품에 수입관세를 매김으로써 촉발되는 녹색 무역전쟁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장관님, 이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보셨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사실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10개 국가과제 가운데서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조성 정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재정 금융 세제 등을 포괄한 정책을 말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그리고 여러 전문 연구기관 등과 협력을 해서 이 세제에 대한 검토를 충실히 하고 또 업계에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인식과 교육이 된 후에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너무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녹색성장을 통해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우리가 좀 더 연구를 강화해서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추세하고 그다음에 이를 시행하려고 하는 국가들과의 공조 협력 등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대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관님, 2011년 9월에 경기도 남양주에서 열리는 국제행사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세계유기농대회입니다.

○**박대해 위원** 이 세계유기농대회는 패스트푸드와 유전자 변형 식품으로부터 벗어나 웰빙 및 유기농식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친환경산업을 발전시켜 세계경

쟁력을 갖추게 하자는 그런 국제행사입니다.

이 행사장에는 110개 국 3000명의 외국인과 3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약 520억 원의 경제적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팔당의 유기농단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지역 농민과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 유기농단지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사이의 갈등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공교롭게도 이곳이 4대강 사업에 편입되는 지역이 일부 포함되면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유기농단지 농민들을 강제로 쫓아낸다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주민들 불만이 많고 유기농사업을 권장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하느냐 하는 불만이 굉장히 큼니다.

○**박대해 위원** 예, 지금 팔당 유기농단지 가운데 4대강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농가가 몇 호 정도 됩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사실은 유기농가 수는 537가구인데요, 여기에 4대강 살리기 사업 문제로 해서 떠나 주도록 협력을 요구받고 있는 농가는 마흔여덟 농가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굳이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농가 면적으로 보더라도 22ha로서 2%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알겠습니다.

4대강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48가구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가령 대체농지를 조성해 주는 등의 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보상을 하면서 가능한 대체농지 조성까지를 겸행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농민들에 대한 대책으로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세계대회가 열리는 남양주를 포함해서 세 군데에다가 대체 유기농 시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미 예산도 92억이나 투자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 이 사업을 제대로 해야 내년도 유기농대회를 개최하면서 일부 농민들의 불만을 재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본 위원이 지난 2월 환경부 업무

보고 시에 한강 수질오염에 대해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취지의 질의를 하면서 한강 상류지역 수질오염 원인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단위면적당 10배 이상 과다 투입하는 농경지 비료 살포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 기억이 나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대해 위원** 사실 유기농업에 사용하는 유기 비료는 화학비료보다 총질소는 1.3에서 17배 낮지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1.5배,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2에서 1.8배, 총인은 1.3배에서 1.6배 높습니다.

장관님, 유기농 비료는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수질오염의 주범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분명합니다마는 농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수질 관리에 대단히 중요한 BOD, COD 측면에서 그리고 특별히 4대강을 보 건설을 통해 물을 집약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인에 대해서는 확실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유기질비료입니다.

○**박대해 위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농’이라는 단어가 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일반 국민들은 팔당 상수원보호 지역에서 유기농업이 친환경적이고 수질오염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오해를 부르고 갈등과 반목으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팔당 유기농지에서 수십년간 터를 닦아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자신의 전부인 논과 밭을 떠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 그분들의 선택이 후회되지 않도록 환경부장관을 비롯해서 관계 부처에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팔당 상수원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이미 국토해양부하고 4대강추진본부에 수질 관리하는 환경부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대책을 강구해 주도록 부탁을 했고 농림수산식품부에도 그와 같은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같은 값이면 유기농 발

전에도 걸림돌을 덜 주면서 그분들의 민원도 해결해 주면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대해 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재윤 위원님이십니다.

○**김재윤 위원** 김재윤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이신 강우일 주교님께서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한국 천주교 주교단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김재윤 위원** 내용을 보면 ‘한국 천주교의 모든 주교들은’ 모든 주교들입니다. 모든 주교들은 현재 우리나라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이 나라 전역의 자연환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교님들이 4대강 사업이 우리나라 전역의 자연환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지요, 장관님?

○**환경부장관 이만의**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대강 살리기 사업 현장에 가서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분들은 큰 공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겁니다.

○**김재윤 위원** 그럼 주교님들이 전체적으로 보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추기경님들이 보시는 견해가 있겠지만 이것은 정확한 과학과 기술 그리고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재윤 위원** 주교님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듣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볼까요.

‘우리 산하에 회복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대규모 공사를 국민적인 합의 없이, 국민적인 합의 없이, 법과 절차를 우회하며, 법과 절차를 우회하며 수많은 굴삭기를 동원하여 한꺼번에 왜 이렇게 급하게, 왜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여야 하는지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주교님들은 우리 산하에 회복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대규모 공사를 국민적인 합의도 법과 절차를 우회하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

하고 있는지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각 종교계라든지 사회 각 분야의 영향력이 크신 지도자 분들한테 이와 같은 중요 국책 사업에 대해서 소상히 처음부터 끝까지 사전에 설명을 올려서 이해를 구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크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 변화 대응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또 그 사업의 특성이 물 사업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우리나라 기후 조건에 부응하는 공정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만년을 두고 가꾸어 온 소중한 작품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정부 당국자들과 국민 모두가 우리 자신과 미래의 세대에게 책임 있고 양심적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주교님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 분들은 더욱더 강경합니다.

2010년 3월 8일 전국 사제 선언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걱정하고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자 젖줄인 4대강을 파헤치는 죄, 그 죄를 덮기 위해 실정법도 어겨 가며 무리하게 진행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국민의 뜻은 외면하고 죽임의 사업을 마치 살림의 사업으로 이야기하고 동참하고 있는 정치인들……’

장관님, 지금 이 분들이 환경운동가들도 아니고 야당 대변인 성명도 아니고 천주교 전국 사제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수천 년 우리 곁에서 흐르던 강물이 만신창이로 파헤쳐 흙탕물이 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죽음의 상황을 끊어야 합니다.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 강의 죽음은 결국에게 우리에게 대재앙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죽음의 상황을 끊지 않으면 결국 우리에게 대재앙으로 돌아온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신부님들이세요. 신부님들이 여야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그러시면서 우리가 그 고통을 피하려면 지금 당장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님들만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들이 4월 3일 날 생명과 평화를 여는 2010년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을 했어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현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개발정책은 민중의 생활 터전과 생태 질서를 파괴하고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과 경외감을 말살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태환경을 이윤 창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4대강 개발 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주의 경제정책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4대강 개발 사업을 반대할까요?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환경분과위원회에서는 반대한 일이 없고 자연의 원리와 또 국민들의 여망을 감안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라는 격려를 받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생명과 평화를 여는 2010년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입니다.

그러면 대한조계종, 불교계에서 또 2010년 3월 25일에 성명을 냈어요. 더 강력하더라고요. ‘경제 살리기를 주요 공약으로 정권을 창출한 이명박 정부는 허울 좋은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의 하나로 포장한 4대강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우리 국토 전체의 생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개발 이익이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평화로웠던 주민들의 지역공동체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불필요한 대규모의 토목 공사를 강행하며 활발하게 살아있는 강을 도리어 죽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자연의 섭리를 거슬러 파괴하고 강과 함께 숲한 생명들을 이 땅에서 죽이는 일이 바로 4대강 살리기 공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스님들이 4대강 살리기를 강과 함께 숲한 생명들을 이 땅에서 죽이는 공사라고 지적하고 있을까요? 우리 스님들이 야당 지지자들입니까?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입니까? 신부님, 목사님, 스님들이 왜 공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시면서 ‘이러한 생명의 근원인 강을 국민적 합의, 그리고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진행하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 조계종 스님들이 국민적 합의도 없이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사전 조사도 없이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지

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4대강 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종교계도 아니고 가톨릭, 개신교, 불교계, 다 반대합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존경받던 법정 스님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정치인 몇몇이 신성한 국토를 자기 생각대로 파괴하도록 해서 안 된다’ 존경받는 법정 스님이 우리 민주당이 좋아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종교계는 이렇다 하지요. 그럼 그렇게 열심히 홍보하고 많은 예산 들여서 하는데 국민의 70% 가까운 분들이 왜 반대합니까?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은 그리고 국무총리와 장관은, 행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의 뜻대로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겠다는 정부가 왜 국민의 여론과 반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끌고 가는 거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

○**김재운 위원** 국민의 여론과 반하는 것을 무리하게 끝까지 하겠다. 그러면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의 주장이 맞는지.

저는 자연 습지를 파괴하면서 인공 습지를 만드는 나라도 참 어이없는 나라지만, 그럼 보시자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아름다운 구담습지가 공사 전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습지였고 우리들에게 늘 생명과 풍요로움과 여유를 주는 곳이었어요. 구담습지 현재 모습 보십시오. 이렇게 파괴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참담합니다. 지울 스님이 찍어 오신 사진인데요,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그다음에 해평습지 알고 계시지요? 해평습지가 얼마나 소중한 습지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곳에는 재두루미—천연기념물 203호지요—, 흑두루미—천연기념물 228호—, 큰고니, 쇠기러기, 청둥오리, 매일 1만 5000여 마리가 10월 중순에서 3월까지 찾아든 곳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지요. 여기가 구미시하고는 1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아름다운 해평습지를 싹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뭘 만듭니까? 구미시와 10km 떨어진 곳에다가 다목적 종합경기장, 축구장 10면, 야구장, 인라인장, 농구장, 배구장, 체육시설 60면, 수변공원, 피크닉

장, 산책로…… 여기 찾아가기도 힘들 거예요. 구미 시민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습지 파괴해 종합경기장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과연 행복해 할까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람사르 총회까지 개최한 나라인데요, 장관님 생각할 때 자연 습지를 이렇게 파괴하면서 인공 습지를 만드는 것도 우습지만 인공 습지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답변을……

○**김재운 위원** 자연 습지를 훼손하고 인공 습지를 만드는 것이 람사르 정신인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계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떠한 부문이든지 보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톨릭, 기독교, 불교, 어느 종교계에서도 또 우리 사회 일반에서도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면 어느 것이 주고역사적으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어떤 바탕 위에서……

○**김재운 위원** 그것도 의견이 팽팽할 때 얘기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닙니다. 제가 만난 큰스님들은, 저는 큰스님들을 많이 뵈었습니다. 전혀 견해가 다릅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계 지도자들도 제가 많이 만났는데 견해가 다릅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노력은 하되 환경부에서 과학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질을 살리고 환경과 생명이 충만한 강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오히려 격려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김재운 위원** 장관님, 이미 그것들이 현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습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습지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여기 감천하구 공사 전 모습, 감천하구 현재의 모습, 달성보 공사 전 모습, 달성보 현재 모습, 경천대 이 멋진 강이 이렇게 파괴되었습니다. 경천대 공사현장 보십시오. 이래도 할 말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어요. 공사가 딱 착수되니까 이것은 경악을 금치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습지만이 아니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자연의

상태가 파괴되고 있는 현상이 바로 눈앞에서 보이는 겁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쁜 공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원 공사를 할 때 가서 보면 파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윤 위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공원을 놔두고 왜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인공 공원을 만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닙니다. 저희들은 수질, 수량을 동시에 해결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기후변화 때문에 어떠한 문제를 맡게 될 것인가를 과학적으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택한 장기적 비전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각자가 보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사업을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감히 올리고요.

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습지는 강에 물이 풍성할수록 더 많은 습지가 생성이 되고 습지의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사업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3년이면 모든 결론이 다 납니다. 그래서 그때 가 가지고 전후 대비를 하고 평가를 받아도 늦지 않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윤 위원** 요새 전문가가 아니라 초·중·고등학생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웃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당장 눈앞에 사진 딱 보여 주면 알아요. ‘바위 늪구비 공사 이전에 이렇게 됐었어. 지금 이렇게 됐어. 앞으로 이렇게 될 거거든.’ 보여 주면 ‘왜 이렇게 돈 들여서, 국민의 혈세 들여 가지고 낭비하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제가 새마을운동을 할 때 초가지붕을 슬레이트나 기와지붕으로 갈아 끼우는데 갈아 끼우는 과정에서 보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김재윤 위원** 장관님, 비교할 것을 비교하십시오.

○**환경부장관 이만의** 상징적인 말씀이지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 위원** 장관님, 환경 파괴 그리고 멸종위기종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단양쑥부쟁이 아시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여러 번 가 봤습니다.

○**김재윤 위원** 이런 멸종위기종 다 보전하겠다

고 했는데 잘 보전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충분히 보전됩니다.

○**김재윤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자료를 다 갖고 와서 지적하는 거예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감사합니다. 저희가 위원님 지적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재윤 위원** 점검하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4대강이 매우 심각한데 철저히 검증하시고 환경영향평가 잘하시고……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김재윤 위원** 국토해양부가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대강 국민의 뜻대로 반드시 중지해야 되고,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4대강 사업은 국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업이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서, 4대강 청문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철저히 규명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진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차명진 위원** 한나라당 부천 소사 차명진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랜만입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자주 못 뵈고 죄송합니다. 아쉽습니다.

○**차명진 위원** 상식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숲이 강원도를 가건 경상도를 가건 경기도를 가건 상당히 우거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습니다.

○**차명진 위원** 이렇게 숲이 우거진 이유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손이 닿았기 때문일까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6·25 후에 완전히 민둥산이라고 알려진 산이 저희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

력을 통해서 오늘날 그렇게 우거졌습니다.

○**차명진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숲이 우거진 이유는 그야말로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열심히 조립한 결과이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노력 덕택에 숲이 푸르고 그 숲과 어우러진 생태계가 훨씬 풍성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휴전선 북쪽에서 보는 개성이나 그쪽의 민둥산과 다름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저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차명진 위원**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의 다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손을 대지 마라. 자연 그대로 놔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조차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 자연에 한번 가 본 적이 있고 인간의 흔적을 남긴 적이 있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산하에 과연 자연 그대로가 있을까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자연 그대로는 원시인데요, 원시에는 문명이 꽃피지 못합니다.

○**차명진 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 4대강과 관련해서 저는 문제는 이거라고 봅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인간의 손이 가해지느냐 아니면 이미 우리가 무심하고, 그리고 강을 거의 배설의 장소로 생각했던 인간의 손이 닿은 장소를 그대로 놔두느냐 그 둘 중의 하나지 원시 그 자체는 이미 4대강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제가 오늘 신문에서 한강을 콘크리트 뚝칠을 했다고 보는데 4대강도 그렇게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을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보도한 걸 봤습니다. 사실 한강의 르네상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여러 댐을 포함해서 한강 수계에 이루어진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방금 존경하는 차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자연을 여러 측면을 감안해 가지고 지혜롭게 한다면,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와이즈 유스 오브 내추럴 리소시스(wise use of natural resources), 자연 자원에 대한 현명한 이용을 권장하는 것과 같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은 반드시 인간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명진 위원** 그래서 이 점을 장관님 좀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4대강과 관련된 정부 쪽의 여러 가지 설명을 보면 4대강 이후에 어떤 모습이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쉬운 얘기지만 근본적으로 4대강 살리기를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누차 계속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4대강은 그야말로 원시적인 자연적 그대로의 자연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렇습니다.

○**차명진 위원** 아마존강조차 상당히 사람의 손길이 가 있는데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4대강은 그동안 무심하고 배설로 생각하는 인간의 손길이 가해졌던 그런 4대강입니다. 그런 4대강을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랑스런 인간의 손으로 다시 점검하고 가꾸는 그런 사업이 4대강 사업이죠,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본질을 꿰뚫어 보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차명진 위원** 그걸 분명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아주 요즘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과연 수질을 좋게 할 것인가, 악화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주변의 생태계를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또는 이것이 홍수를 예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술적인 논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차명진 위원** 그리고 사실 그 결과는 두고 봐야 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와 관련된 어떤 선언적인, 이미 경험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아주 곤혹스러운 건 뭐냐면 강을 준설하는 것 자체가 바로 생명의 원리에 위배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떤 근거를 들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반론 제기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볼 때 진짜 손을 안 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시는데 현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우리 존경하는 차명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하신다면 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명진 위원** 제가 그래서 아주 상당히 이 문제에 관해서 고뇌를 많이 했습니다. 강 준설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얼굴에 성형을 하듯이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인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나름대로 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입니다. 이 카톨릭 국가에서 1934년부터 86년까지 우리 돈으로 한 30조 정도를 들여서 지속적으로 론강을 준설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 댐을 건설하고 수로를 정비하고 제방을 보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프랑스에 계신 종교인들께서 이것은 생명의 질서를 거스르는 사업이다라는 문제제기,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네덜란드는 개신교 국가입니다. 여기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약 33조를 들여서 종합적 치수대책인 룸 포 더 리버(Room for the River)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로 그다음에 홍수터를 준설하고 제방을 다시 개선하고, 이런 치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퇴적토도 준설하고 있습니다. 이 건 우리 4대강 사업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 네덜란드 국가의 종교인들이 이것은 생명의 질서를 거스르는 사업이다라는 문제제기가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없습니다. 독일에서도 카톨릭 국가인데 역시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종교인들의 이의제기가 없습니다.

장관님, 이러한 사례를 말씀이죠, 제가 볼 때는 좀더 확인하셔서…… 물론 이 사업 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겠지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제는 어느 사업 하나 전문가 독단으로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정부가 독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같이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참조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자료를 마련을 해서 4대강 사업과 통하는 또 인류사회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많이 모아서 국민들이 알고 민주적으로 더 사업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명진 위원** 예, 종교인들께서는 설명하거나 납득하시도록 하거나 오해를 없애도록 하거나 하시지 마시고 나름대로 훌륭한 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냥 이 사례들을 충실하게 그냥 소개해 드리는 것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차명진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대해 위원님께서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분들 중에 팔당호에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차명진 위원**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했어요. ‘어, 유기농, 친환경인데’, 왜? 두물머리도 제가 자주 가봤으니까, 친환경인데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야, 저 비료들 어떡하나’ 했었는데 유기농은 친환경이라는 얘기를 듣고 친환경인데 이것까지 왜 못하게 하나,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환경부장관 이만의** 유기농이 친환경 농업으로 알려져 있고 또 유기농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이라든지 농사방법 차원에서만 보면 굉장히 권장할 만한 일이고 정부가 또 권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있어서는 바로 그 유기농의 방식이 수질오염의 원천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다른 경종 방법보다 더 많은 해로운 물질을 강으로 유입시킨다는 차원에서 설득을 하고 보상과 함께 대체농지 조성 등 그분들이 협력해 주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명진 위원** 그런데 왜 주변에서는 유기농이 친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환경 유기농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없애려 하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차명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더 설득력 있는 그런 자료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습니다.

○**차명진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유기농대회가 마침 2011년, 내년도에 있다는데 이번에 우리가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그 유기농들이 없어지게 되면서 유기농대회를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마도 우리 4대강 살리기 사업 구역에 포함된 유기농가는 아까 답변 과정에서 올린 것처럼 48가구인데요. 48가구는 대체 농지를 통해서 좀 부담스럽겠지만 계속 유기농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아울러서 500가구에 가까운 나머지 농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계 유기농대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경기도 그리고 관련 기초자치단체 세 군데하고 환경부, 농림부 등 관련 부들도 함께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차명진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4대강과 관련해서 수질이 좋아지냐 나빠지냐 논쟁을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 특정한 부분, 다시 말하면 보를 설치해서 물을 가두면 수질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라는 그런 소위 말하면 아주 줄보기를 갖고 아주 주어진 부분만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질 전체는 그런 수량이나 물의 속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더 중요한 건 본류에 어떤 질의 물이 유입되는가……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렇습니다.

○**차명진 위원** 그것이 더 중요한데, 그리고 그런 물들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의 논쟁이 논쟁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은 빠진 상태에서 보 자체가 수질을 맑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좀 제가 볼 때는 신발 신고 다리를 굽는 식의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논쟁의 지점을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저희들로서는 유입수의 수질관리, 지천, 지수, 셋강, 도랑까지도 관리를 해서 4대강을 살리는 내용들을 설명을 많이 합니다 마는 반대하시는 분들은 보에 집중해 가지고 그러한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종합적인 큰 눈으로 보지를 않고 보에 관한 논란을 하면서 그게 콘크리트시설 아니냐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큰 범위의 정보를 제공해서 앞으로라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김상희 위원님이십니다.

○**김상희 위원** 민주당 김상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우려들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리 지금 정부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더라도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 그 원인을 지금 장관께서는 잘 몰라서,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국가 사업, 국책사업 중에서 4대강 사업만큼 정보 제공이 많이 된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고 끊임 없이 걱정하는 것은 이 사업이 모든 법과 또 지켜야 될 것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강행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마스터플랜 아시겠지만 아주 급조된 사업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생략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4개월, 형식적으로만 했습니다. 문화재 조사도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 부분은 지금도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위장된 대운하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4대강 사업이 4대강 복원사업입니까, 아니면 4대강 개발사업입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4대강을 말 그대로 살리는 사업입니다. 지금 강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김상희 위원** 4대강을 살린다 함은 4대강 복원 사업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겠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4대강의 기능 및 수질복원 측면도 강합니다.

○**김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요,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이걸 4대강 개발사업이고 위장 대운하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가 설명을 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이는데 어떻게 국민이 믿겠습니까?

환경부와 관련된 사항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

다.

환경부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감 때 끊임없이 문제 제기했습니다. 4개월 동안에 주로 문헌에, 더군다나 오래된 연구조사에 근거한 이 환경영향평가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것들이 지금 첫 삽을 뜨자마자, 삽을 뜨자마자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불거져 나오는 것은 아주 부분입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부실 및 누락 그리고 사후조사 위임한 부분,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질예측 모델링, 굉장히 부실하게 이루어져서 국감 때 지적했지요?

그리고 퇴적토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표층만 조사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심층 퇴적토에 대한 조사,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이 이 심층 퇴적토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준설 과정이 오염에 미치는 영향,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효과 없는 탁수 저감 대책입니다. 오탉방지막, 그거 하면 된다고 얘기했고 흡입식으로 준설하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진공흡입식 준설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토가 안 됐고 오탉방지막 효율이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태 부분, 4계절 조사 누락했습니다. 현장조사, 실사 안 했습니다. 생물종 다양성 훼손에 대한 검토 없었습니다. 법적 보호종의 서식지 훼손, 제대로 조사 안 했습니다. 대체서식지, 대체서식지 하는데 대체서식지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대체서식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연구돼 있는 것 없습니다. 자연습지 훼손과 과도한 인공습지 조성, 도대체 인공습지가 습지로서 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조사 없습니다.

토양 부분입니다.

오염 퇴적토에 대한 조사, 누락됐습니다. 퇴적토 관리 방안 없습니다. 적치장 마련 없이 했습니다. 지하수 침수에 대한 것은 검토 없었습니다. 지금 침수 문제, 금방 드러나고 있지요?

경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김재운 위원 지적했듯이 그 수려한 경관들이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경관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여론 수렴, 없었습니다.

홍수 피해 가중에 대한 연구조사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이 부분 영향평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 지금 함안보나 농민들이 안개 문제며 그 지역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실질적으로 농사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없었습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이런 정도의 환경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들이 삽을 뜨자마자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재평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짚어 주신 항목별로 영향평가를 해서 그것이 모아진 것이 아주 두꺼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입니다. 다만 공사를 하다가 보면 미리 예측 못 했던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사후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를 주로 주업으로 하는 환경부와 산하 전문기관이 그렇게 모든 것을 결해 버리고 엉터리로 한다면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환경부장관님께서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보면 환경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수십 조가 들어가고 자칫하면 우리 국토가 절단 나고 생명의 강이 다 죽어 버릴 수도 있는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이렇게 부실하게 했으니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의하면 평가서의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해당 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승인기관장 등과 협의를 거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맞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첫 삽을 뜨자마자, 지금 시작입니다. 이런 정도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드러났는데 어떻게 환경부장관께서는 그렇게 한가한 소리를 하시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닙니다. 저는 현장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보십시오.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것을 시정하고 교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상희 위원**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달성보 퇴적 오니토 분석 결과 비소, 수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6가 크롬, 아연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달성보의 경우, 보의 건설을 위해서 준설하는 경우를 보면 위에 하천수가 있고 사질토가 있고 점성토가 있고 풍화토·풍화암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윗부분을, 보통 지금 평균한 3m 정도 준설을 하지요? 3m, 5m 준설하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것은 보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상희 위원** 보에 따라서 다른데 보 때문에도 하지만 앞으로 강 수심 확보를 위해서 준설을 할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닙니다. 주로 보 있는 곳을 많이 준설하고요. 다른 곳은……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보 있는 곳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심 확보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니, 수심이 어떤 곳은 2m, 3m 정도면 되기 때문에……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이것을 보십시오.

이번에, 지금 이 위에 있는 표토층만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있는 퇴적층은 조사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다 보니까 위에 있는 사질토, 이 사질토의 특성이 뭐니까? 이 사질토는 강의 오염을, 강을 맑게 하는, 수질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이 사질토가 하고 있습니까. 아시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렇지요.

○**김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4대강 사업에서는

수질을 개선하는,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사질토를 다 걷어내 버리고……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 밑에 있는 점성토를 위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보 건설 현장만 그렇고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김상희 위원** 환경부장관님, 그런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니, 제가 만날 가서 봅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 보십시오.

보 건설 현장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 건설 현장은 물론이고, 그리고 지금 수심 확보하기 위해서 준설하는 데는 다 이런 방식입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수심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깊이 준설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런 것을……

많지 않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 전 구간의 수심을……

○**환경부장관 이만의** 육상 준설구간은 전혀 그와는 거리가 먼 것이고요……

○**김상희 위원** 수심을 조사해서 그 수심의 어느 부분을 몇 m 준설한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무작정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 이만의** 무작정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김상희 위원**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달성보 예정지, 강정보 예정지, 보십시오. 여기에서 지금 침수 피해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사진도 제가 국감 때 장관께 보여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이 부분이, 여기에서 달성보·강정보로 인해서 여기 성서공단이 침수될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이 근처에 아파트 건설 현장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지나갑니다. 이것 조사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번에 함안보와 관련해서 지금 보 높이를 낮추셨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함안보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보 높이를 낮췄고, 낮추는 것이 옳기 때문에 낮췄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 그런 것이 다 지적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 그것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우리는 이미 환경영향평가 때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시공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김상희 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시공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그렇게 추상적으로 합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설계서를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김상희 위원** 이것 다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닙니다.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예상 안 된다고 보는 분이, 과학적으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함안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태 부분 어떻습니까? 생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현장에도 갔었습니다. 그랬을 때 단양쑥부쟁이, 거기 다 보호되고 침수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리섬 다 파헤쳤습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다 파헤치지 않았습니까. 저도 갔다 왔습니다.

○**김상희 위원** 다 파헤쳤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단양쑥부쟁이, 제가 오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김상희 위원** 그리고 삼합리섬은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절대로 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것입니다.

○**김상희 위원** 이미 파헤치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닙니다. 적당히 파헤쳐도 될 만큼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리고 삼합리섬은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삼합리섬에 있는, 표범장지뱀 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것은 문헌조사에서는 있었는데……

○**김상희 위원** 그것 5년 이전에 한 문헌조사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사실조사에서는 안 나왔는데 최근……

○**김상희 위원** 5년 이전의 문헌조사에서는 나왔었다고 여기에도 지적이 돼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러니까 문헌조사에서 지적이 돼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적이 돼 있는데, 그러면 현장조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래서 현장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안 보였었거든요.

○**김상희 위원** 현장조사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안 보였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대응하도록 합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한 게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제대로 환경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이렇게 부실하게 예전에 20년 전에 조사한 것, 문헌조사에 근거해 가지고 한 것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닙니다. 2003년도부터 한강·낙동강 다 조사했고 2007년부터 금강·영산강 조사했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 환경부장관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의 환경영향평가를 해서는 환경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환경부 기능 보장을 해 주십시오, 인력도 늘려 주시고. 그러면 더 잘할 겁니다.

○**김상희 위원** 그리고 4대강 사업은 환경부장관께서 아무리 설득을 하셔도, 아무리 설득하셔도 국민들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종교계를 비롯해서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 지금 마련하셨지요? 생태관광 한다고 그래 가지고 4대강 생태지도 마련하셨지요? 예?

○**환경부장관 이만의** 4대강 생태는 4대강이 잘 만들어지면 그 주변에 이리이러한 관광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런 자료입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아예, 보면 지금 도리섬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삼합리점이라든가 단양쑥부쟁이 이런 것 다 빠져 있습니다. 아예 이 부분은 포기하신 겁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이고, 왜 포기를 합니까? 환경부도 존재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김상희 위원** 여기에는 왜 빠져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보장해 가지고 4대강 사업이 완공된 후에 완벽한 작품을 내놓아야지 지금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것은 완전한 작품이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지금은 미흡합니다.

○**김상희 위원** 단양쑥부쟁이가 그렇게 계속 문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환경부에서…… 앞으로 그냥 예상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닙니다. 저도 현장을 몇 번 가 보고 오늘도 한강청장한테 얘기를 했고……

○**김상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고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이렇게 모든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다시 재평가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이전에는 국민들, 믿지 않습니다. 4대강 사업 중단하시고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현장을 위원님께서 보셨으면 중단하라는 말씀을 안 하실 겁니다, 위원님.

○**김상희 위원** 저 가 봤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강성천 위원님이십니다.

○**강성천 위원** 한나라당 강성천 위원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감사합니다.

○**강성천 위원** 장관님, 그동안 우리 온실가스 국가 인벤토리(inventory)가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에서 각 부문별로 모든 걸 작성했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작성한 모든 부분을 지식경제부가 주무부처로서 통괄 발표하고

또 통계도 내는데, 이게 주무부처였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지식경제부는 기업 부문을 맡고 있기 때문에 경제지에서 기사를 많이 써 줍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총괄은 환경부가 합니다.

○**강성천 위원** 이제 지금, 어제부터 했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어제부터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강성천 위원** 어제부터, 그동안은 지식경제부가 하다가 어제부터 환경부가 주무 부처로 태어났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강성천 위원** 우리 온실가스 국가 인벤토리가 기후변화협약의 의무감축국 수준에 비해서 초보적인 수준이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기후 변화 대응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국가 온실가스 관리 정책의 기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위원님하고 견해가 같습니다.

○**강성천 위원** 이번 시행령으로 환경부도 선진국처럼 온실가스 관리 대표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환경부가 앞으로 어떤 관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환경부는 우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벤토리(inventory)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산업 부문은 지식경제부한테, 그리고 아까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교통·건축 부문은 국토해양부, 또 식품 제조 부문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의 도움을 받고 폐기물 관리 부문은 환경부가 직접 주관을 하고 이것을 모아서 국가 단위의 대외적으로 공격력, 확정력을 갖는 인벤토리 구축하고 검증까지도 담당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담당하기 위한 기후변화 관련 센터를 환경부에 설치하고 앞으로 운영해 나가게 되면 초보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말하는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강성천 위원**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몇 년이나 걸릴까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제 판단으로는 한 2년 정도 지나면 충분히 선진국 수준에 갈 수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강성천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온실가스 국가 인벤토리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요, 환경부가 온실가스 관리 기관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의 녹색성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방향을 잡고 저희가 앞으로 세워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제대로 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면서 또 비산업 부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총괄 지도적인 기능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리고 엄홍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9년에 제가 국정감사 때 지적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국립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경주국립공원 산불 방지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기억하십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때 산불 방지·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신다고 그때 답하셨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 예, 그랬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래서 국정감사 지적 사항의 처리 결과로 국립공원 산불 방지 대책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세웠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 예, 산불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때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 그때 저희들이 산불 조심 기간을 정하고 또 출입 통제를 하고 또 CCTV도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금년 경주국립공원에 산불 발생 예방 자료를 요청했는데 산불 발생이 1건도 없다고, 대책을 잘 세워서 그런지 진짜 1건도 없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 예, 그런데 사실은 1월 초순에 3건이 발화가 되었습니다. 발화가 되었는데 공원지역 내에 2건이고 공원지역 밖이 1건인데 이 발화가 산림으로 옮겨 붙지를 않았기 때문에, 발화 지점만 확인하고 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성천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지금 산불이 하나도 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 예, 그렇게 됐습니다.

○강성천 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발화는 되었는데 산림으로 옮겨 붙지를 않고 산불로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허락해 주시면 발화된 현장 사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발화 면적이 적게는 1㎡, 좀 크게는 80㎡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산림으로 옮겨 붙지를 않았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되었다고는 보고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랬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 예.

○강성천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제가 경주소방서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는 한 100평 정도, 330㎡하고 그 화재 원인은 담뱃불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평 정도 났는데 그것도 담뱃불, 지나가던 차가 발견하고 내려와서 끈 이런 사안으로 경주소방서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지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래 주세요.

제가 이사장님을 나무라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 알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제가 국정감사를 한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산불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 산불을 예방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료도 요청을 했고 또 지적도 하는데 이사장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시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 알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앞으로도 산불 예방에 더욱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 예, 그리고 그 이후로 지자체하고 소방서하고 저희 사무소하고 이렇게 방화로 추정되는 발화 요인이 좀 있어 가지고 포상금 500만 원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공고를 하고 해 가지고 그 이후로는 그런 요인이 생기지를 았았습시다마는 경주 지역이 특히 인가가 밀집되어 있고 또 행인들이 많은 지역이 되어 놓아서 산불 발생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대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심해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예, 들어가세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 감사합니다.

○**강성천 위원** 장관님, 오늘 환경부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음식문화 조성이라고 하는 거기에 쓰레기 그리고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이라고 여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뷔페 등 발생원 특성에 맞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책 추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닙니다.

지금까지 음식물 문화를 선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도했다가 또 중간에 안 되면 그만두고 역대 정부마다 한번 시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똑같은 기준에서 하지 말고 분야별로 그 특성을 살려 가지고 맞춤형 음식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러한 차원에서 각 분야별로 안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이달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면서 성공하고 있는 사례들의 예를 주고 마련토록 했거든요. 합동작업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은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휴게소에서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른 휴게소로 그것을 확산시키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러니까 휴게소에서 이것이 시범 운영한다 하는 얘가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강성천 위원** 시범운영을 하는데 이게 강제성이 있냐 아니면 자주성이나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쪽에서 다행히 호응을 하고 있고요, 또 음식문화를 선진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각 유관기관, 민간 전문단체 등이 모여 가지고 토론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토론회를 하면서 우리도 하겠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가 시범을 보이겠다라고 그 사장님도 자신 있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밑에서 지금 작업들을 하고 다만 전국 고속도로가 똑같이 하면 좋겠지만 또 그러다가 안 되는 수가 있으니까 맞춤형으로 한두 군데를 먼저 해서 잘 되면 예를 들어 6~7월부터, 또는 7~8월부터 본격화시키겠다는 계획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집단급식소, 정부기관이나 대기업의 구내 식당 그리고 큰 음식점, 호텔 이런 곳으로 세분화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지금 쓰레기종량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강성천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음식쓰레기 수거 제도 개선이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수거 수수료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종량제보다 좀 더 부담을 시키겠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수준에서……

○**환경부장관 이만의** 현재는 그 쓰레기 전체에 대해서 종량제를 하고 있는데요, 음식 부문을 좀 특화해 가지고 그 식당에 또는 집단급식소에 음식쓰레기를 얼마나 내놓는가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시키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쓰레기종량제 전체가 아니고 음식쓰레기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종량제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많이 내놓으면 돈을 더 물게 된다, 즉 경제적 손실을 자초하는 일이다 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음식문화 개선을 하고 서비스 개선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강성천 위원** 장관님, 쓰레기가 요즘 자원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자원입니다.

○**강성천 위원** 자원인데요, 자원은 자원대로 수거하고 그리고 부과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런데 음식쓰레기 문제는 다른 쓰레기하고 좀 달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 음식이 반드시 소금 국물을 끼고 있기 때문

에 그 처리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노력을 다해서 줄이는 것이 상책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음식물 가공 처리 시설이 큰 성과를 내지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원리로 비추어 볼 때 퇴비를 만들어 놓아도 해당 과수원이나 농가에서 쓰겠다고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줄이기가 우선이고 앞으로 가공 기술도 더 발전시키는 등 음식문화를 전반적으로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재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이찬열 위원 수원 장안 출신 이찬열입니다.

장관님, 혹시 오니토에 대해서 냄새를 한번 맡아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여러 경우의 하수슬러지도 맡아보고 분뇨처리장에 가서도 맡아보고 맡아보았습니다.

○이찬열 위원 오니토는 분뇨처리장까지는 안갈 것 같은데……

○환경부장관 이만의 제가 목포시장을 옛날에 했는데요, 거기가 해수를 이용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것을 건조시켜서 출하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그때 평가하느라고 맡아보고 했습니다.

○이찬열 위원 사실 오늘 오니토를 가져오려고 제가 12월 6일에 신곡포 근처에 가서 오니토를, 직접 정세균 민주당 대표님하고 가서 오니토를 채취했거든요.

그때 냄새를 맡은 경험이, 저도 그렇게 맑은 물에서만 사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까지 맡아본 냄새 중에서 정말 가장 고약한 냄새가 오니토 냄새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이찬열 위원 왜 그런 것이 거기에 퇴적이 되어서 쌓여 있다, 신곡보가 거기서 불과 얼마 안떨어져 있습니다. 안양천 합류 지점 거기서 했는데, 그런 것이 흘러 나가야 되는데 보로 인해 갖고 막혀서 그게 거기에 퇴적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보보다 더 중요한 사전적 고려 요소는 누가 과연 그와 같이 악취를 유발하

고 심하게 부패할 수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으로 유입시켰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오늘도 경기도의 모 자치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마는 보 자체의 시스템이 그대로 흘러보내 버렸으면 냄새가 덜 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보가 없으면 그 물의 흐름에 의해서 오니토도 어디론가 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산되어서?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럴 수 있는 것을 아시면서, 물론 국토해양부에서 보를 만들고 건설을 하지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전혀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업무적인 연관이 이 4대강 사업에서만큼은 100% 있는데……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과연 환경부가 국토해양부를 얼마나, 이런 환경 쪽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며 얼마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환경부를 제일 싫어했던 부처가 국토해양부하고 지식경제부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싫어하고 갈등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면 이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협의하고 협력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4대강 살리기에 도입된 보는 신곡보와 같은 고정보가 아니고 가동보가 돼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 퇴적물을 바로 내보낼 수 있도록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게 환경부 요구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이찬열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70년대에 시골 초가지붕을 슬레이트로 현대화시킨다고 다 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이찬열 위원 지금 그게 애물단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이찬열 위원 그것 말씀 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 이겁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했고. 또 그때는 국민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고. 그랬는데 지금 20~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슬레이트가 처치

곤란입니다, 암 발생 요인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이찬열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4대강 사업하고 뭐가…… 저는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연관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은 지금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고 있고……

제 말씀을 좀 들어 보세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이찬열 위원**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또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문제가 예상될 거라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4대강 사업이 줄속으로 이루어지고, 빨리해야 된다는, 슬레이트 그것 1~2년 사이에 지붕 교체한 것 아닙니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슬레이트 할 때는 몰라서 했지만 지금 4대강 사업은 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고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것까지 다 예측을 하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3년 안에 처리하려는 저의가 도대체 됩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이번 4대강 사업을 서둘러서 국책사업으로 선정하게 된 근본 배경은 기후변화라고 하는 예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변화가 왔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후변화라고 하는 문제가 없다면, 지금 중국에 5000만이 넘는 사람이 수개월째 비가 안 와 가지고 가축이 죽어가고 마을을 떠나야만 하는 상태인 심각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것 예전에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이찬열 위원** 그러면 4대강 사업하면 중국에 비울 수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가 여름철에 몰아오면 그것을 모아 놓아 가지고 긴 가뭄이 오더라도 이제는 소방차에다 물 실어 보내는 비극은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저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사업을 선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하여튼 그 정도는 우리가 여태까지 한 댐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 저는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댐의 수량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되고, 물부족국가로 지정을 받아 가지

고……

이번 4대강 살리기를 통해서 보 16개를 통한 수량 확보가 8억t 그리고 기존 저수지 96개의 제방을 높여 가지고 수량을 늘려서 확보한 것이 2억 5000만t 그리고 별도의 댐 2개를 건설해서 하천도 살리고 수량도 확보하자고 해서 2억 5000만t 해서 13억t의 물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후변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왜 그렇게 성급하냐’ 하신 대목에 대해서 저희도 겸허하게 그런 말씀이 나온 배경을 이해를 합니다.

○**이찬열 위원** 장관님은 성급하다고 하는 내용만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렇지 않습니다.

○**이찬열 위원** 국민들의 7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환경부장관 이만의** 영종도 인천공항을 만들 때 지금 4대강 살리기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모 교수 분이 전문가군을 대표해서 수많은 전문가를 끌고 영종도 공항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엄청나게 두꺼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현재 연속 5년간 세계 제1위 공항 위치를 점거한 선진화된 공항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보는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그 견해를 참고는 하되 해야 될 일은 때를 놓치지 말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찬열 위원** ‘4대강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도 봅니다. 그 동안에……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닙니다.

○**이찬열 위원** 거의 1조에 가까운 예산을 환경·수질 개선을 위해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만 해도?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이찬열 위원** 그러면 그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4대강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주무장관님이……

그러면 1조 원을 어떻게 썼기에 1조를 써 가면서도 4대강이 죽었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지금까지는 강에다가 별로 투자를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먹는

물 공급하는 데 투자를 해 오고, 솔직히 말씀을 올려서 하수처리장이나 산업폐수를 처리하는 폐수처리장을 만들더라도 강에 물이 정상적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리 전문가들의 예측을 바탕으로 배출기준치를 정했거든요. 그런데……

○이찬열 위원 그런 것은 전문가들의 예측을 따라가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물기 때문에 그것이 안 맞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대강 살리기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배출기준을 선진화하고 또 하나는 강에 물을 확보해 놓으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이찬열 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탁 방지에 대해서 여기 우리 보좌관들이 여러 가지를 써 놓았는데, 실제로 저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탁 방지라는 것이 물리적인 특성을 방지할 뿐일 것이고 화학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왔을 때는 오탁 방지 가지고 이게 방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탁방지막은 탁수 대책입니다. 흙탕물이 생기면 그 흙탕물이 너무 멀리까지 뻗어 나갈 경우에 물을 쓰는 취수구까지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해서 오탁방지막을 어떤 곳은 아주 가까이, 어떤 곳은 이중 삼중으로 쳐서 탁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금속이라든지 아주 해로운 유독물질이 만일 공사과정에서 나왔다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수질오염 방재단을 지금 현재로서는 130명으로 특별 편성을 해 가지고 24시간 감시·감찰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완벽하다고 제가 자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갈 때마다 적어도 세계적으로 성과를 얻고 있는 회사들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이 생기면 바로 수질오염 방재단하고 협의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아마, 이 사안도 환경영향평가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렇습니다.

○이찬열 위원 들어가 있지요, 분명히?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이찬열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2월 달에 하천공사 시 탁수로 인한 영향조사 및 탁수발생 저감방안 연구입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이찬열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는 한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이찬열 위원 작년 12월 예산 통과되기도 전에 함안보가 보니까 이미 진행이 많이 됐던데, 이것 연구를 의뢰한 게 2010년 2월입니다. 그리고 이 과업기간이 6개월인데 그러면 지금 작업을 한창 하고 있으면서 2월부터 6개월, 즉 시작하면서부터 올 8월까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제가 그 용역이 있었는지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 경험에……

○이찬열 위원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한 겁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제 경험에 비추어서 추정컨대 현재까지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이번 4대강 살리기 공사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오탁수 방지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작업하는 과정에 한 두 건이라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것을 특별 처리하기 위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말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 이런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찬열 위원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수질관리팀인데 이 수질관리팀을 환경부에서 갖고 오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 국토해양부에다 놔두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이 수질관리팀은 환경부로 이관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만일 4대강 추진본부가, 공사가 끝나고 제대로 수질하고 수생태 회복이 메인 콘텐츠로 등장을 하면 환경부가 해야 됩니다.

○이찬열 위원 이런 것으로 보면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잘못돼 있는지,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게 서로 상반되고 이중으로 이런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지금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께서……

○**이찬열 위원** 제가 부탁드릴 것은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같으면 강바닥에다가 물어보겠다고 대답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 챙겨 보고 앞으로 그렇게 이중 작업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국토해양부에서 환경부 싫어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면 똑같이 섬기는 입장에서 우리끼리 아옹다옹해서 되겠느냐’ 해서 협력 잘 하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시간이 이제 다 가고 저도 마음이 조금해집니다.

또 생태계를 파괴하는 4대강인데 이것도 보면 2010년 1월 달에, 과업기간이 201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국토해양부, 여기는 또 수생태보전팀입니다. 이것도 환경부로 데리고 와야 돼요, 이것도.

○**환경부장관 이만의** 환경부 일입니다.

○**이찬열 위원** 그러면 환경부는 뭐 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여기도 이 사이에 대체서식지를 찾는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사이에 서식지를 어떻게 찾습니까? 연구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저희 환경부 쪽에서도 국장 한 사람을 포함해서 수질 및 수생태 분야 전문가들이 4대강 추진본부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말씀올린 바와 같이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가장 최첨단 기술이나 내지는 비법이 필요하다고 본 모양입니다.

○**이찬열 위원** 장관님, 시간이 자꾸 가는데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철새도래지 서식지 옮기려면—대체서식지 하려면—장관님, 철새한테 어디가 좋으냐고 물어보실 용의 없으세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저도 철새 보호 관련해서 열심히 합니다.

○**이찬열 위원** 단양쑥부쟁이 하는데 단양쑥부쟁이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제일 낫지, 이것 12월 15일까지 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환경부장관 이만의** 단양쑥부쟁이는 저희……

○**이찬열 위원** 한강 보는 황쏘가리한테 물어보고……

○**환경부장관 이만의** 저희 나름대로 확신을 가

지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영산강 이쪽은, 영산강·낙동강은 땀뽀이한테 물어보면 될 겁니다, 이게.

○**환경부장관 이만의** 무슨 말씀인지 새겨서 듣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정부가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 찼는데 중단할 것 같지도 않고, 중단할 때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잘 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진 위원님 순서이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참 초미의 관심은 관심입니다. 4개월 만에 국회 상임위를 열면서 4대강 얘기 하나까 좀 그런데, 한 가지 잠깐 쉬어가는……

기상청 차장님!

○**기상청차장 박광준** 예.

○**조원진 위원** 천안함 지진파, 충격파 태백에서 관측해서 기상청장까지 도달하는 데 시간 얼마나 걸렸습니까?

○**기상청차장 박광준** 태백이 아니고 백령도 아닙니까?

○**조원진 위원** 예.

○**기상청차장 박광준** 저희들……

○**조원진 위원** 우리 지진파 관측소에서 충격파를 감지해서 기상청 본부까지 보고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기상청차장 박광준** 그것은 저희들이 실시간적으로 바로 체크가 됩니다.

○**조원진 위원** 바로 체크를 했습니까?

○**기상청차장 박광준** 예.

○**조원진 위원** 체크했는데 저쪽 청와대에 보고 언제 했습니까?

○**기상청차장 박광준** 3월 27일 날 새벽에 일단 천안함……

○**조원진 위원** 몇 시간 걸렸지요? 지진파, 충격파를 받고 난 다음에 얼마 만에 청와대에 보고가 됐지요?

○**기상청차장 박광준** 약 한 5시간 정도입니다.

○**조원진 위원** 제가 그냥, 참고로 하시고 자료

를 좀 만드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노 위에서 그것을 다뤄야 될지, 오늘 참 보기 힘든, 눈으로 보기가 참 힘들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TV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충격파가 터지면 제일 먼저 아는 게 지진관측소입니다. 관측소에서 먼저 알았으면 그 충격파의 종류에 따라서 벌써 우리가 방향을 잡고 갈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다 놓쳤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우리 기상청하고 중국 기상청하고 정보교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중국 측에다가 물어봤습니까, 그런 충격파를 감지했는지?

○**기상청차장 박광준** 현재 중국 지진국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그것 자체를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그 시간대에 중국 지진국에서 감지한 충격파의 파장, 충격 크기, 파의 종류, 이런 것 다 감지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기상청이 그 정도 시설은 돼 있고 그게 백령도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간과하고 우리가 넘어갔는데 오늘 4대강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다음에 세부적으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상청차장 박광준** 예.

○**조원진 위원** 굉장히 중요한 팩트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다루겠습니다.

청장님, 그다음에 물환경국장님 잠깐 나오시고요.

장관님, 저는 작년 3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 태백에서부터 낙동강 하구까지 3박 4일 동안 18개 지자체 단체장을 다 만나 보고 현지의 목소리를 다 들어 봤습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지금 4대강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공정이 한 20% 정도 보 공사가 갔는데 제가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2박 3일 동안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NGO, 환경단체 그다음에 여러 지역을, 상주보에서부터 함안보까지 8개 보 그다음에 하구언 둑까지 제가 갔다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을 제가 다 봤거든요?

우리 정부 부처가 4대강 사업을 안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홍보를 해도 너무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전제로 하고, 특히 4대강 중에서 56% 정도가 낙동강인데 낙동강 살

리기 사업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고, 저희들이 감히 종교 지도자 분들한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만 있는 그대로는 말씀을 해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2년도부터 86년도에 한강을 할 때 말이지요, 콘크리트로 다 도배를 했습니다. 88%를 콘크리트로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86년도, 82~86년도 한강공사 끝날 그 당시에 어류가 42종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종이 어떻게 늘었냐 하면 71종으로 도로 늘어 버렸어요, 어종이. 조류는 39종이 한강을 찾아오다가 98종으로 늘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당시 한강에서 준설한 준설량이 192만^m입니다. 그런데 낙동강은 131만에서 126만^m거든요, km당. 저 잘 모르겠어요. 왜 한강…… 그렇게 많은 준설을 하고 88%를 콘크리트로 갖다가 부었는데 어종이 늘고 찾아오는 조류가 늘었다는 말이지요. 그 공사가 잘됐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환경이 썩었기 때문에 그것을 1차 숭통을 터준 거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2차로 숭통을 트는 겁니다. 왜 논리를 그런 식으로 자꾸 못 가져 가냐는 거지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 콘크리트는요, 낙동강만 말씀드리면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6% 중에서 60%는 보 공사에만 쓰는 거예요. 일부 환경단체에서 콘크리트 범벅을 하고 있다는데 왜 그것 반박을 못 하시지요? 이게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고 느낀 점은 시민단체에서,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것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가지는 않을 거라는 자신감을 제가 가지고 왔고요.

탁도 문제에 대해서 준설토, 흡입식 준설로 풀립니다. 제 얘기가 다른 것 있으면, 틀리면 얘기해주세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지태** 예.

○**조원진 위원** 그냥 퍼 가지고 신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해 가지고 1차 침사지, 2차 침사지, 3차 침사지…… 제가 현장 가서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설했을 때의 탁도하고 나오고 난 다음에, 강물하고 3차 침사지를 거쳐서 나오는 물하고는 어떤 게 깨끗합니까?

물환경국장! 어떤 게 깨끗합니까?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지태**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 한 3차 침사지 정도 거치면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

○**조원진 위원** 오히려 모래 침사지를 거치면 현재 강물보다 더 깨끗하게 걸러서 들어오는 겁니다. 준설토에 대해 환경단체가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를 해 줘야지요.

또 한 가지, 지하수가 상승해서 문제가 있다. 제가 현장에서 지적했던 게 왜 시뮬레이션 안 하나, 수리모형 시뮬레이션 해라. 그것을 눈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갑자기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교수 한 분이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언론에서 실어 가지고, 우리 지역구 바로 옆에 성서공단이에요, 성서공단이 침수한다고 나와 버렸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 자료를 가지고 하면 10m가 차이 납니다, 지금 달성보에서 강정보 사이 지하수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자꾸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에서 떠드니까 안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힘을 기르라는 얘기입니다. 왜 자꾸 밀리지요? 지금 보 공사는 어쩔 수 없이 밀렸다 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수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는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국회 차원에서 환경부 짝짝 밀어줄 테니까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달성보에 의한 성서공단 문제도 일부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발표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하시고, 그냥 누구 같이 언론 고발하겠다 이 차원이 아니고, 환경부는 그러한 단체가 아니에요. 환경부는 그것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보여 줘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수리모형의 실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14m, 24m, 그렇지요? 그다음에 4m, 11m,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밑으로 보면 11m가 차이 나고 위로 보면 20m가 차이 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 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지금 대운하 문제로, 오늘 또 대운하 문제를 얘기하는데 대운하는 직강 하천을 해요, 직강 하천. 지금 우리 4대강 사업에 특히 낙동강은 직강하천 안 합니다. 사형 하천, 모양 그대로 살려 가지고 뱀 모양의 그림을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국장님?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지태** 일반 경사도를 전부 유지합니다. 일부 도심 구간을 빼놓고는 일

반 경사도를 유지하면서 준설을 하기 때문에……

○**조원진 위원** 아까 해평습지 얘기했는데 해평은 습지도 중요하지만 구미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해평취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평습지는 전체적인 습지의 영향도에서 한 28% 정도 영향을 줍니다. 왜? 습지도 그냥 놔둔다고 다 좋은 습지가 아닙니다. 습지 중에서도 썩은 습지가 있기 때문에, 달성습지 같은 경우는 지금 새들이 안 날아와요. 습지라고 다 좋은 습지입니까, 새도 한 마리 안 날아오는 습지가 있는데? 현장을 가 보고 얘기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습지에서 영향도가 약 한 28% 정도 잡니다. 그런데 해평습지 700만 평에 축구장 만들고, 뭐 만들고 뭐 만들고 그것은 습지 전면에만드는 게 아니고 강변, 수변에 만드는 겁니다. 습지하고 다른 얘기지요.

그래서 낙동강 상류 지역에 있는 전체적인 습지의 영향도가 약 28% 정도 영향이 가는데, 달성습지는 원형 그대로 보존하지만 실질적으로 달성습지 같은 경우에는 상류의 수질 문제 때문에 새들이 날아오지 않는 죽은 습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달성습지가 새들이 날아오는 습지로 해야 된다, 저는 이번이 보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 그런 데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지태** 달성습지 같은 경우 오염도가 높아서 그동안 조류 분포가 적었는데요, 이번에 오염대책 사업이 같이 들어가고 유입하천 저감 사업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보 공사하는 지역에, 낙동강만 해도 8개 보지요. 그다음에 하구원의 지역 한 군데까지 해서 아홉 군데인데요, 실시간 자동수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어 있고, 매시간 별로 수질을 점검하고 BOD·COD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 해평 지역, 그러니까 제일 위의 상주보를 비롯해서 이쪽 같은 경우에 1.0 정도 BOD가 되고 대구 시민들이 먹는 강정취수원은 한 2.0 정도 되고 제일 밑에 낙동강 하구원이 3.0ppm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나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탐사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안동댐 담수율이 24%였습니다. 올해 안동댐 담수율이 그다음에 제가 방문했을 때 46%입니다. 물이 좀 많은 거지요, 그렇지요? 24% 때 안동댐에 갔을 때 밑에서는 농사짓는 분들이 물을 써야 되는데 물을 빨리 방류하라고 지금 난리입니다, 아우성이고. 안동댐에서는 방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장기간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한 게 지금 만약에 물을 방류해서 한 달 정도 더 가뭄이 오면 식수제한을 해야 됩니다. 이 차원입니다.

지금 기상의 변화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물의 관리는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작년 우리 그런 경우를 겪었지 않습니까? 24% 담수율에서 1%라도, 한 달만 더 비가 안 오면 식수제한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과연 식수제한이 들어오는 상황이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에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도자로서, 한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그것을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폭우가 온다고 하고 읍니까? 대구 근방 밑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산전수전(山戰水戰)’이라고 합니다, 산전수전. 겨울에는 산전이고 여름에는 수전인데 산전은 산불 때문에, 겨울만 되면 산하고 전쟁을 한 겁니다. 수전은 물 때문에, 상류 지방은 강원도의 지천·지류에 의해서 홍수가 나지만 대규모 홍수는 고령 지방 이하에서 다 납니다. 그런 것을 왜 홍보를 안 하시냐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산전수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은 물을 담아 둘 수 있는 그릇이 낙동강 안동댐밖에 없습니다. 안동댐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2008년도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사망자 많이 났을 때, 안동댐 콘크리트 댐 아닙니다. 방류를 해야 되는데 물이 넘치면 안동댐 어떤 상황이 오는지 아십니까? 긴급 상황이 올 수밖에 없고 댐이 무너지는 상황이 옵니다. 왜 현실을……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비상 수로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얘기로 과거에 이러이런 정책 때문에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 되지요. 그 조차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당시의 공무원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그런 상황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일주일만 폭우가 상류 지방에 쏟아지면 지금 이 상태로서는 하류는 그냥 가는 겁니다. 상황이 지금…… 기상 변화라는 게 아열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열대 20%예요, 지금. 그러면 아열대 기후의 기본은 스콜(squall) 아닙니까, 스콜? 일시적인 폭우들이 팍팍 쏟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기상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도자가 대통령이 돼도, 어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제는 물 관리할 때가 됐다. 단지 하나, 그 물 관리를 동시다발적으로 가야 되느냐, 또 이런 여러 가지 환경단체나 종교 지도자들한테, 특히 국민들한테 많은 그것을 얻어서 가야 되느냐 그런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빨리 이런 걸 했다, 이것을 그냥 놔두자 이 차원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현장을 갔다 온 사람으로서 제가 할 얘기도 참 많은데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냥 들으시고 다음에 할 기회가 많고 또 4대강 사업에 대한 토론회 비슷한 게 또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조원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희덕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홍희덕 위원** 장관님, 고생 많습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감사합니다.

○**홍희덕 위원** 제가 어제 여주 도리섬을 긴급하게 다녀왔습니다.

4월 14일자 언론에서 4대강 공사 구간인 어제 가본 여주 바위늘구비 지역에서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쭉부쟁이 얘기 많이 나왔지요. 그리고 표범장지뱀도 두 번씩이나 발견했습니다. 파괴되고 있다고 보도된 것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홍희덕 위원** 본 위원은 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언론에서 대서특필도 했고 국민의 걱정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수자원공사에서 무슨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고 특히

환경부는 긴급하게 조사를 해서 당장 공사중지 조치를 하거나 대책을 강구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 있던 의원실 우리 보좌관한테 연락이 왔어요. 단양쑥부쟁이 생육지가 언론보도가 있는 이후에도 추가로 파괴되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13, 14 이틀간에 언론에서 4대강 공사로 그런 멸종위기종이 파괴되고 있다고 보도가 된 마당인데 환경부를 포함해서 국토해양부가 비상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무리 빨리빨리 밀어붙이는 4대강 공사로 할지라도 최소한 양식이 있는 정부라면 그렇게 대처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책은커녕 버젓이 포크레인으로 멸종위기종 식물 군락지를 파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거기로 달려갔어요. 가면서 '나 혼자 가면 어떻게 하나, 한강유역관리청의 관계자 나와라, 같이 가보자' 이렇게 해서 청장은 바빠서 못 나왔다고 그래서 전화 통화하고 담당 과장하고 현장에서 조사도 하고 상의도 했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기가 막혔어요. 장관님께서도 많이 갔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 언론보도가 된 직후에 수습하러 가 보신 적이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래서 바로 어제 우리 국장보고 가자고 그랬는데 어제 오늘 양치질을 못할 정도로 바쁜 일정 때문에 못 갔습니다마는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청장님도 오늘 오실 줄 알았는데 청장까지도 못 왔더라고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청장은 밖에서 따로 만나 가지고 오늘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래서 어제 다녀온 것까지 저도 몇 차례 그곳을 갔다 왔는데 가 보니까 신록사에서 쪽 내려가면서 지금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 그곳이 참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세운 표지판도 분명하게 있고요.

그런데 막상 가 보니까 그 일대는 온통 다 파헤쳐져 있고 야산 같은 곳도 다 깎아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언덕을 중심으로 도리섬 전역이 사실상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고 도리섬과 바위늪구비에 단양쑥부쟁이가, 그것 보

면 밀집형이 있고 흩어진 곳도 있고 또 개별로 개체형으로 자생하고 있고, 특정 지역만 자생하고 있지 않고 전체 넓은 곳에 분포하고 영동고속도로 지점에서 흥원창까지 그 일대에 모두 단양쑥부쟁이가 자생하고 있어요.

장관님도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홍희덕 위원** 그런데 도리섬 언덕에 수자원공사가 단양쑥부쟁이를 원형 보존하는 지역이라고 표시해 둔 곳이 있는데 그 표시해 둔 지점에서 보니까 10m 앞까지 포크레인으로 파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좀더 말씀드리면, 어제 오전에 언론보도가 나고 나서 수자원공사 광천보 건설단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논의를 해서 현장에 한번 같이 가 보자 해서 같이 들어갔더라고요. 가 보니까 단양쑥부쟁이 군락지를 막 표면부터 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까지 아주 기절초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현장의 포크레인 작업은 수공 단장이 중단을 시켰다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저도 여러 번, 겨울에는 몰랐는데 봄에 가서 싹이 돌아 올라오는 단양쑥부쟁이를 여러 번 가서 봤기 때문에 저도 볼 줄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수십 개 뿌리까지 막 훼손되어 있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가서 생생하게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자연환경과장님이 나오셔서 저와 같이 봤고요.

오늘 한강유역청에서 여기 아무도 안 나오셨습니까?

○**한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국장 윤명현** 예, 나왔습니다.

○**홍희덕 위원** 누구십니까? 어저께 나오셨던 과장님 아니네?

○**한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국장 윤명현** 예, 담당 국장입니다.

○**홍희덕 위원** 장관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저희 보고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환경영향평가가 부실로 된 건지, 누락된 건지, 아니면 조사가 되었는 데도 일부러 파괴했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조사 내용을 사전에 다 반영해서 영향평가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고요, 존경하는 홍희덕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흠어져 있는 산생 개체가 거기 뿐이 아니고 여러 부분에 걸쳐 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특히 야생동·식물보호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아까 환경청장한테 얘기하고 돌아왔습니다.

○**홍희덕 위원** 잘하신 거고요, 그렇게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 갔더니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포크레인으로 작업하는 기사 그분한테 이런 게 적절한지 모르지만, 과장님이나 내가 가는데도 포크레인으로 잘못하면 그냥 끌어 물을 것 같아. 수자원공사 또 지금의 국토해양부 위세가 그렇게 당당합니까? 저는 아주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 200m 떨어진 곳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 데리고 저기도 한번 가 보자 해서 갔더니 거기서 또 단양쑥부쟁이가 나오는 겁니다, 현장에서.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래서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현장 인력에 대해서 이 부분, 환경과 특히 보호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라고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당해 사업장은 수자원공사하고 현대건설이 책임을 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고 한강청에서 교육을 직접 하든지 확인하든지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어쨌든 바위늘구비하고 지금 지적하는 그곳은 정말 특단의, 환경청에서 역할을 해서 더 이상의 그런 게 없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이런 문제가 환경영향평가들이 부실했기 때문에 단양쑥부쟁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포크레인으로 마구잡이로 파괴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작업을 할 때 수자원공사에서 단양쑥부쟁이 자생 지역을 표시할 때도 짝이 올라올 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 해야 된다. 쑥부쟁이 누가 잘 봅니까? 그렇게 희귀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짝이 올라오지 않고 그냥 겨울철에 확인하기 힘들어요, 전문가 아니면. 그것도 다시 그렇게…… 지금도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영향평가가 부실했다, 저는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현장에서 군락지에 대해서는 경계 표시를 해 놓은 것을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흠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주의를 철저히 강구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

○**홍희덕 위원** 장관님, 언론보도되고 거기서 환경단체들이 해서 바로 어저께 훼손했던 구역은 제가 가 보니까, 훼손된 곳을 살펴보면 아주 집단적으로 자생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힙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다시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어쨌든 멸종위기종이 훼손된 사실은 환경청에도 확인을 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제도를 이참에 아예 폐지하든지 아니면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홍희덕 위원** 저는 제안드립니다.

지금 공사를 일단 일제히 중단하고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구간만 중단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워낙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조사가 어쨌든 부실했음이 명백해 졌고요, 추가 파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그리고 나서 정밀조사 할 것을 요구하고요.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접하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과는 정말 다릅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렇습니다.

○**홍희덕 위원** 4대강 공사에 대해서 찬성, 반대 입장을 떠나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리고 멸종위기종을 훼손하면서까지 공사를 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당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일 신문지상에서도 4대강 공사로 수질사고가 나고 있고 멸종위기종이 파괴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 눈으로까지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4대강 공사로 인해서 멸종위기종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수수방관하면 이걸

분명히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회 차원에서 현장을 직접 조사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파괴된 현장에 좀 가서 직접 현장 조사하고 대책을 좀 강구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저는 일정을 좀 조정해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시급하게 일정을 잡아서라도 현장에 한번 가서 더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국회가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가 무슨 보통 그렇게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환경단체나 심지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갔는데도 위협적으로 대하고 이런 것들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한번 가보자라는 거고요.

우리 위원회가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할 때까지는 그 일대 즉, 도리섬과 바위늪구비 공사는 일단 전체적으로 잠정 공사를 중단하고 추가로 발생할 위기종의 파괴를 위해서 조사를 다시 들어갈 것을 제안하고요.

그래서 장관님, 본 위원과 한강유역관리청이 함께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 명백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입니다. 아까 우리 장관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처벌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신 것은 아주 적절한 결단이었다고 이렇게 하고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홍희덕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현장에 갔다 왔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홍희덕 위원** 14일이죠,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환경부에서 해명자료를 좀 이렇게 발표를 하셨죠?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홍희덕 위원**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현재 공사는 단양쑥부쟁이 서식지와 이격된 거리에서 진행 중에 있어서 단양쑥부쟁이의 훼손은 없다”, 이걸 현장에 제가 갔다 와서 말씀드리는데 이걸 거짓말이에요. 어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함께 가서 확인했잖아요. 이걸 거짓된 자료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정자료를 내시고 환

경부가 사과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직접 다녀와서 봤잖아요. 환경청도 확인했던 말이죠. 바로 정정자료 내십시오. 그래야 그나마 우리 환경부가 제대로 감시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단양쑥부쟁이에 대해서 현장을 중심으로 걱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도 좀 많은 우리 야당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장관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토해양부나 지식경제부, 이제는 서로 좀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협조할 것은 하고 협조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개발부서하고 환경보전하는 환경부가 그렇게 협조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아무리 한 정부라 하더라도 분명하게 지적할 것은 지적하셔야 된다, 철저히 지적하고 잘못된 건 고발해야 돼요. 고발해야 돼.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될 것이다, 마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분들이 환경부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도록 계속해서 그런 의미에서의 협조관계를 조성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에 환경부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가 하는 일을 그분들이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해서 지금까지보다 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홍희덕 위원** 제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홍희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환경부 및 기상청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이화수 위원님, 원혜영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권선택 위원님, 박준선 위원님, 이두아 위원님, 홍희덕 위원님으로부터 각각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두 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취지에 맞도록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모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개월을 보내고 난 후에 열린 여야 간 업무보고를 환경부로부터 듣는 날이었습니다. 오

랜만에 만나서 최근 우리 사회 일각 또 종교계에서 전반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4대강 문제에 대한 심각한 환경훼손, 생태계 파괴 문제에 대한 질의가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환경부는 이 논란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4대강 사업의 방법이 4대강을 살리겠다는 그 의지를 질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기왕에 재정을 투입해서 더 나은 생명과 생태와 물이 확보가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에 대한 방법, 추진 방법,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아직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착각이라면 그것을 수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민이 우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까 장관님께서서는 새마을 지붕개량공사 말씀을 예를 드셨어요. 공사 도중에는 보기가 안 좋고 먼지도 나고 흉물스러운데 개량공사를 다 하고 나니까 말끔하고 보기 좋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10년 더, 20년 더 살아보니까 그 지붕개량공사마저도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지 않습니까? 석면으로 초가집 지붕개량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모순을 우리가 지식이 과학이 더 발달해서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김으로써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또 4대강 사업의 추진 이유도 되는 것인데 기후변화와 물 부족, 이런 것에 대해서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해야 된다는 논리에는 또 하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도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측 불가하고 그 예측 불가한 것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거나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석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30년 이상의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학 진보가 있었고 석면의 위해성을 우리가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만약에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이 아니고 물 부족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이 아니고 그것이 착각이었고 수정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 닥친다 할 때는 그것을 뜯어낼 시간도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 일간지 보시면요, 아마 보수신문과

진보신문 망라해서 4대강 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또 어떤 보수신문은 적절한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일거에 한꺼번에 해서 만약에 그것이 착각이었을 때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하지 말고 하나 해 보고 믿어 의심치 않을 때 또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중재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 말은 국토부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계획을 수립한 부서는 자기 스스로의 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부의 속성입니다. 그 정부 안에서 제동을 걸어야 될 부서가 있다면 우리 환경부입니다. 장관님이십니다.

그런데 장관님이나 우리 환경부는 이 사업 시작된 지가 이미 해를 넘기고요, 6개월 이상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의 자세나 지금 6개월 지나서나 무슨 점검을 하셨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오수, 탁수, 단양썩부쟁이 예를 들었지만 '그것 하나, 고жат 그것 가지고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무기구도 없고 뭐가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예를 적절하게 이해하시라고 든 것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수단을 다 가지고 계세요. 동원할 수 있는, 산학 협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과 예산을 다 갖고 있으십니다. 위원님들은 그러한 것들을 우려스럽게 문제제기를 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입니다, 미안스럽게도. 국회가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심각한 고민을 그런 관점에서 보살펴 줘야 될 부서가 우리 환경부입니다. 그것을 입이 닳도록 목이 아프도록 하는 것은 이 사업이 무슨 대통령의 사업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반드시 훼방을 놔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종교계가 그렇게 할 때는 그만한 여야 입장을 떠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슨 생명, 생태 근본주의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없으면 종교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잘못되면 종교계도 역시 있을 수 없다는 위기감 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법이, 그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환경제앙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더 늦기 전에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물 부족으로 가장 심각한 괴로움을 앓고 있는 지역이 아마 낙동강 지역일 겁니다. 그런데 또 가장 많은 보가 또 낙동강에

일시에 투입됩니다.

오늘 조선일보에는…… 아, 어제였습니까? 조선일보는 그 보는 국제기준으로 말하면 댐이다라고 했습니다. 보의 폭이 4개 정도는 500m가 넘고요, 그 높이가 10m가 넘으면 국제기준 분류에 의하면 보라고 할 수가 없고 댐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형 댐이 낙동강에 4개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댐 설치로 인해서 환경, 생태, 물의 흐름, 수질 악화, 이런 것을 점검하고 사전예고를 내려야 될 부서는 환경부가 아니겠습니까? 국토해양부 절대 거들떠 보지 않을 겁니다. 우리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분발을 좀 촉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환경부장관님과 기상청 차장님 및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석해 주신 산하기관장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고 오후 2시에는 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강성천	권선택	김상희	김재윤
박대해	박준선	원혜영	이두아
이찬열	이화수	조원진	조해진
차명진	추미애	홍희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원창희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관	이만의
차관	문정호
기획조정실장	홍준석
물환경정책국장	김지태
자연보전국장	정연만
자원순환국장	백규석
대변인	김진석

감사관	유복환
국제협력관	김찬우
녹색환경정책관	이정섭
환경보건정책관	오종극
기후대기정책관	윤종문
상하수도정책관	안명현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노동부	
장관	임태희
차관	이재필
기획조정실장	이영철
고용정책실장	조병구
정책기획관	한창재
국제협력관	이서의
노동시장정책관	장무영
직업능력정책관	권순배
고용서비스정책관	전현운
인력수급정책관	정현배
고용평등정책관	김윤배
노사협력정책관	이성길
근로기준정책관	박정균
산업안전보건정책관	
공공노사정책관	
대변인	
감사관	
기상청	
차장	박광준
기획조정관	조만범
예보국장	진기원
관측기반국장	엄정규
기후과학국장	박이서
지진관리관	김애병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김대모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이원배
경제사회발전위원회	김유재
노사정위원회	노민기
중앙노동위원장	김선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정인수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한국고용정보원장	

한국산재의료원 이사장 직무대행	김	훈	직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이사장	허	병	기
한국기술대학교총장	전	운	기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장	김	원	민
국립환경과학원장	윤	승	준
국립생물자원관장	김	종	천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이	필	재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	승	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조	춘	구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엄	홍	우

【보고사항】

○의안 회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0. 2. 23 김상희·홍희덕·김재윤·강기갑·박선숙·안규백·오제세·이미경·이찬열·권영길·이정희·최영희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0. 2. 23 김상희·안규백·박은수·김동철·강기갑·최재성·김영진·이미경·이찬열·김재윤·최영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4일 회부됨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

(2010. 2. 24 권선택·임영호·박순자·유성엽·이상민·이명수·김창수·이진삼·박상돈·이재선·김낙성 의원 발의)

2월 25일 회부됨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2. 25 정부 제출)

2월 26일 회부됨

우주기상업무법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2010. 2. 26 조원진·김성태·김정권·박준선·유기준·이명규·이사철·이진복·이한성·이해봉·한선교·홍희덕·황우여 의원 발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10. 3. 2 김재윤·강기갑·고승덕·김동철·김상희·김영진·김우남·양승조·오제세·원혜영·유원일·이미경·이찬열·전혜숙·홍희덕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3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10. 3. 4 홍영표·정장선·김진애·최문순·이강래·김춘진·우제창·조정식·이낙연·김동철·김재균·양승조·안규백·이찬열·김상희·전혜숙·신학용·이성남·박선숙·최영희·최규성·백재현·박은수·원혜영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10. 3. 4 홍영표·정장선·김진애·최문순·이강래·김춘진·우제창·조정식·김동철·이낙연·김재균·양승조·안규백·이찬열·김상희·전혜숙·신학용·이성남·박선숙·최영희·최규성·백재현·박은수·원혜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5일 회부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0. 3. 5 이명수·이해봉·김을동·임영호·박상돈·강기갑·이종혁·정해걸·이재선·권선택·김용구 의원 발의)

3월 8일 회부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10. 2. 2 김재윤·강창일·고승덕·김상희·김성곤·김영진·김우남·김재균·김효석·박은수·송영선·양승조·이명수·이찬열·이춘석·이해봉 의원 발의)

3월 9일 회부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0. 3. 9 전혜숙·최철국·박은수·백원우·최영희·이미경·조정식·김영록·안규백·박주선·양승조·최문순·전현희·김재윤 의원 발의)

3월 10일 회부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해걸 의원 대표발의)

(2010. 3. 10 정해걸·한선교·유승민·정갑윤·유기준·강기갑·정희수·이한성·황영철·김태환·이명수·김세연·이재선·이시중·김성태·정영희·여상규·정양석·김옥이·이철우·이화수·신성범·송훈석·정수성·유성엽·김영우·장제원 의원 발의)

3월 11일 회부됨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 발의)

(2010. 3. 11 원혜영 · 전해숙 · 김재윤 · 조정식 · 이찬열 · 양승조 · 최철국 · 이춘석 · 홍희덕 · 최문순 · 김성순 · 안규백 · 추미애 · 변재일 · 김진애 · 김부겸 · 권선택 · 박지원 · 김상희 · 신낙균 의원 발의)

3월 12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2010. 3. 17 박순자 · 조원진 · 김성수 · 홍정욱 · 손숙미 · 이명규 · 이한성 · 원희목 · 이해봉 · 박보환 · 김효재 의원 발의)

3월 18일 회부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 발의)

(2010. 3. 19 곽정숙 · 권영길 · 강기갑 · 이정희 · 홍희덕 · 김재윤 · 유원일 · 조승수 · 김영진 · 최문순 의원 발의)

3월 22일 회부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

(2010. 3. 29 박준선 · 강성천 · 박대해 · 서상기 · 송영선 · 이두아 · 이화수 · 정갑윤 · 조원진 · 황영철 의원 발의)

3월 30일 회부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

(2010. 3. 31 이화수 · 한선교 · 신학용 · 김성태 · 정해걸 · 박대해 · 박준선 · 노철래 · 이사철 · 원유철 · 정영희 의원 발의)

4월 1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2010. 4. 5 김소남 · 나경원 · 김효재 · 정갑윤 · 원희목 · 김태원 · 강명순 · 강창일 · 홍준표 · 이은재 의원 발의)

4월 6일 회부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

(2010. 4. 6 강성천 · 권택기 · 김금래 · 김성태 · 김소남 · 김옥이 · 박대해 · 박준선 · 신지호 · 안효대 · 유정현 · 이두아 · 이정선 · 이화수 · 임동규 · 정미경 · 정옥임 · 조원진 · 차명진 · 현기환 · 황영철 의원 발의)

4월 7일 회부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 발의)

(2010. 4. 7 강기갑 · 이정희 · 곽정숙 · 홍희덕 · 권영길 · 유성엽 · 김우남 · 강석호 · 최철국 · 강기정 · 정동영 · 조승수 · 김춘진 · 유원일 · 김재윤 의원 발의)

4월 8일 회부됨

산업재해근로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사철 의원 대표발의)

(2010. 4. 8 이사철 · 조원진 · 조문환 · 고승덕 · 공성진 · 김낙성 · 최철국 · 강석호 · 송훈석 · 박주선 · 현경병 · 이계진 · 정해걸 의원 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0. 4. 8 오제세 · 강기정 · 조영택 · 김성곤 · 문학진 · 양승조 · 김재윤 · 박선숙 · 이명수 · 임영호 · 이인기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9일 회부됨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10. 4. 14 김재윤 · 강기갑 · 강명순 · 강성천 · 강창일 · 권선택 · 김동성 · 김동철 · 김부겸 · 김상희 · 김성곤 · 김성조 · 김영록 · 김영진 · 김우남 · 김유정 · 김정훈 · 김진애 · 김춘진 · 김충조 · 박기춘 · 박대해 · 박선숙 · 박보환 · 박영선 · 박준선 · 박지원 · 배은희 · 백원우 · 서종표 · 손범규 · 송광호 · 신학용 · 안규백 · 안민석 · 안효대 · 양승조 · 우윤근 · 우제창 · 원혜영 · 원희목 · 유선호 · 이두아 · 이미경 · 이용섭 · 이찬열 · 이춘석 · 이학재 · 이화수 · 임해규 · 장윤석 · 장세환 · 전현희 · 조영택 · 조원진 · 조해진 · 차명진 · 최영희 · 추미애 · 홍영표 · 홍재형 · 홍희덕 · 황우여 의원 발의)

4월 14일 회부됨

○의견 제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1 정부 제출)

4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제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2009. 12. 10 노영민 · 주승용 · 최철국 · 김재균 · 이용삼 · 이시종 · 우윤근 · 강성중 · 김유정 · 김창수 의원 발의)

2010년 4월 7일 국토해양위원회 의견 제시